



NORTH KOREA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박영호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홍우택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CONTENTS

제 4 권 2 호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10년 4월

발 행 2010년 4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618
(팩스)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NEULPUM* (주) 늘품플러스

전화 070-7090-1177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 1. 개별국가 3
- 2. 유엔과 국제협력 15
- 3. NGO 22
- 4. 분석 및 평가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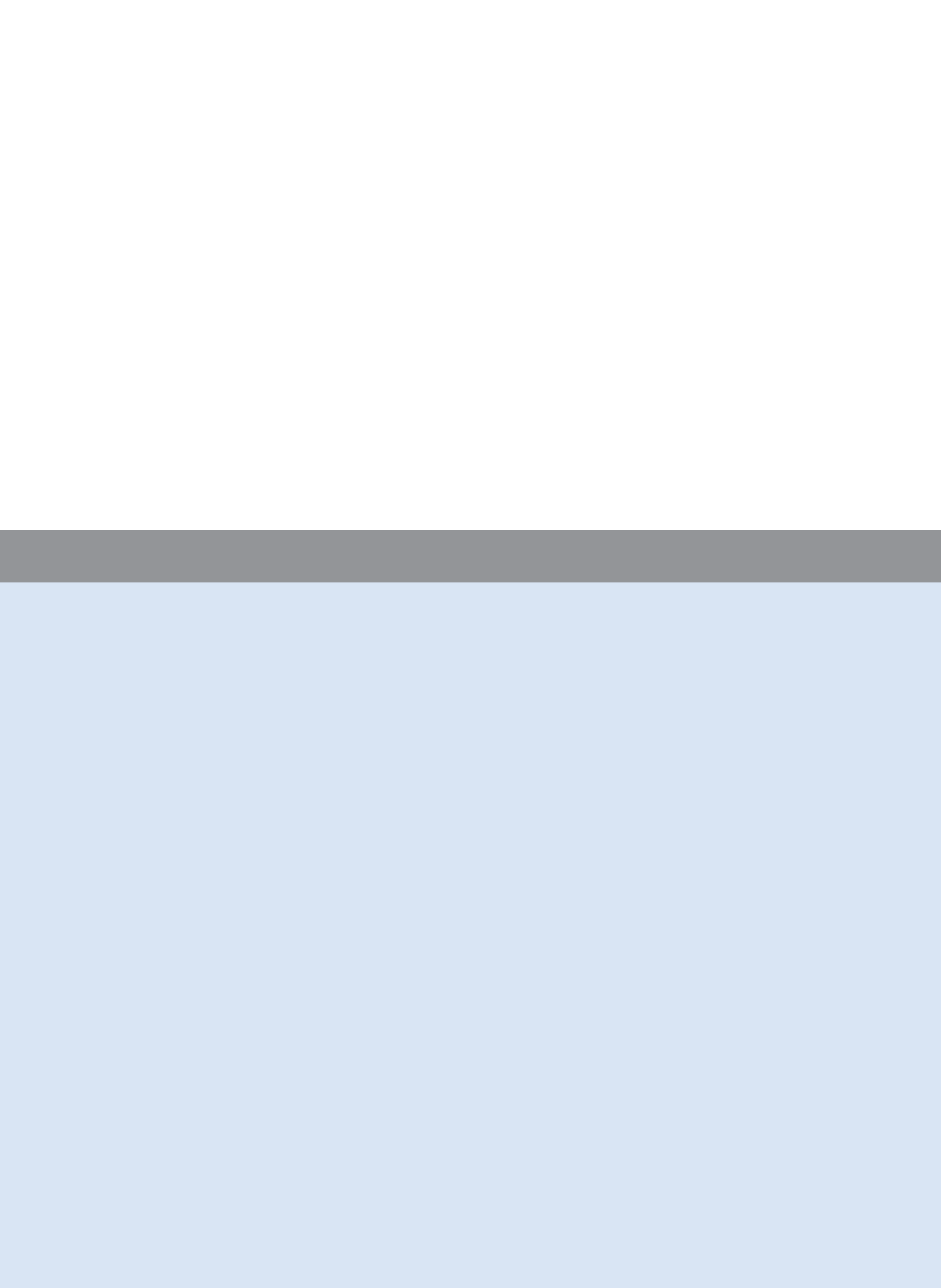
| 북한의 대응

- 1. 미국에 대한 반응 35
- 2. 일본에 대한 반응 36
- 3. 유엔에 대한 반응 37
- 4. 남한에 대한 반응 39
- 5. 분석 및 평가 41



| 인도주의 사안

- 1. 탈북자 45
- 2. 납북자 62
- 3. 국군포로 65
- 4. 이산가족 68
- 5. 분석 및 평가 73





1. 개별국가	3
2. 유엔과 국제협력	15
3. NGO	22
4. 분석 및 평가	29

1. 개별국가

가. 미국

미국 북한인권특사에 로버트 킹 내정(RFA, 7.2)

-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특사에 로버트 킹(Robert King) 전 하원 외교위원회 국장을 내정함.
 - 북한인권특사는 대사급 상근직으로 위상이 높아져 오바마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 킹 내정자는 지난해 사망한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2004년 통과된 북한인권법 작성에 참여

미국 상원, 미국 재정착 탈북자 지원 강화(7.13)

- 미 의회 상원은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국무부에 요구함.
 - 상원 세출위원회는 이주·난민지원예산 16억 8천만 달러를 승인하면서, “북한인권 재송인법 규정대로 북한 난민들도 지원하라”고 요구
 - 또 ‘2010 국무·대외사업 예산안’ 발효 60일 내 북한 난민들의 미국 재정착 사례를 늘리기 위해 취한 조치와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장관이 제출할 것을 의무화

NED, 올해 대북 언론매체 등에 140만 달러 지원(RFA, 7.16)

- 미국민주주의기금(NED)은 15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39만 788 달러를 11개의 북한 관련 단체와 기관에 나누어 지원했다”고 밝힘.
 - 자유북한방송 21만 6천 2백 달러, 자유조선방송 23만 3천 588달러, 열린북한 방송 21만 6천 달러, 북한개혁방송 10만 달러 각각 지원
 - ‘데일리NK’에 13만 달러, 북한 관련 잡지 ‘림진강’에 7만5천 달러, 미국의 방송평가 회사 ‘인터미디어’에 5만 달러 지원
 - 이밖에 NED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K 지식인연대’ 등을 지원

워싱턴포스트, 북한 정치범수용소 인권유린 심각(WP, 7.20)

-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구글어스를 통한 정밀사진검색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북한 인권백서,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집중 조명함.
 - 수감된 정치범은 20만 명에 달하는데 옥수수과 소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치아가 빠져 잇몸이 검게 변했고, 뼈가 약해져 등이 굽었다고 지적
 - 그래픽을 통해 요덕 15호 정치범수용소의 공개처형장소와 재소자시설, 묘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수용소에는 감시탑이 세워져 있고, 전기가 흐르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보도
 - 비협조적인 재소자의 경우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하기도 하며 일부는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에 자갈을 넣은 채 공개 처형되고 있다고 보도
 - 나치의 집단수용소보다 12배나 길고 소련의 강제수용소 ‘굴라크’ 보다 두 배나 긴 북한의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
 - 14개였던 수용소는 약 5개의 대규모 수용소로 통합됐는데 제22호 노동수용소(회령수용소)의 경우 길이가 50km, 너비가 40km에 달해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크고, 이곳에는 5만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설명
 - 미국과 북한 관리들이 만날 때 수용소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협상테이블에서 인권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

미국 내 인권단체, “중국 당국 미국 여기자 녹화물 이용 탈북자 단속” 비난(8.22)

-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인 기자들의 촬영 동영상을 이용해 중국 내 탈북자를 단속한 처사를 비난함.
 -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커런트TV 기자들의 촬영 장비와 동영상을 압수, 그 동영상을 이용해 탈북자 단속에 나선 중국 당국의 조치는 비인도적이며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언급
 - 또 “중국 당국이 한국인 인권운동가를 추방하고 탈북 고아들을 보호하던 고아원 5곳도 폐쇄한 조치는 국제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지적

미국 정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 연기(RFA, 9.9)

-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 석방을 위해 방북하는 시기에 자칫 잘못된 신호로 비춰질 수 있어 이를 연기했다”고 보도

2009년 미국 입국 탈북자 수, 2008년보다 감소(RFA, 9.22)

- 2009년 회계연도 중 8월 말까지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24명으로 2008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24명으로 지난 회계연도의 37명 보다 13명이 감소(2006년 회계연도 9명, 2007년 22명, 2008년 37명)
 - 2006년 5월 5일 최초로 6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92명

미국, 북한인권특사에 로버트 킹 지명(9.24)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로버트 킹 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 국장을 북한인권특사에 지명함.
 - 킹 특사(플레처스쿨, 국제외교관계 박사학위)는 의회 근무 25년 중 24년을 고(故)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2004년 '북한인권법' 발의에 관여

미국, 북한인권특사, 보즈워스팀서 활동(10.3)

- 미국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팀의 일원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며 킹 대사가 북·미 양자대화에 실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 핵 문제 외에 미사일 문제는 물론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관측되나, 실제 참여 여부는 불확실

로버트 킹 특사 지명자, 북한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접근(10.6)

- 북한인권특사의 공식 임무는 '북한주민들의 근본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그 같은 활동을 조정' 하는 것으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팀의 일원으로 활동할 것임.
 - 국무부 인권국 및 동아태국, 대북제재 조정관과 유기적인 연계 속에 활동할 예정
 - 킹 특사 후보자는 북한인권에 대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원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

북한 강제수용소, 금품강탈 수단으로 활용(WP, 10.6)

- 워싱턴포스트는 6일 하와이 소재 동서문화연구소(동서센터)가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보고서를 인용, 사설시장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북한당국이 이러한 거래 활동을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사적 거래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을 편취하는 ‘마피아식’ 통제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 동서센터의 보고서(작성자: 마커스 놀랜드, 스티븐 해거드)는 2004년과 2005년 중국의 11개 지역에서 1천 346명의 탈북자들과, 지난해 말 한국에서 300명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통해 작성
 - 보고서는 북한의 안전요원들이 사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아무런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뇌물을 제공받으면 임의로 풀어주곤 한다고 지적
 - 특히 사설시장에서 거래를 하다 체포된 사람들을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에 한 달 정도 수감,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이 고문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줘 향후 사설시장에서 거래를 하다 재차 적발될 경우 쉽게 금품을 내놓을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
 - 보고서를 작성한 놀랜드 연구원과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정치범을 탄압하기 위해 마련한 스탈린식 강제수용소를 탈바꿈시켜 주민들을 통제하고 돈을 뜯어내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이번 인터뷰와 분석 작업을 통해 확인된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

월스트리트 저널, 핵에 밀렸던 북한인권문제 검증 직면(WSJ, 10.21)

-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동안 핵 문제에 밀려나 있던 북한인권 문제가 12월 초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가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하게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함.
 - WSJ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의 외교관들과 주요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자료를 재검토하면서 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관계자들에게 따질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
 -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관련 국가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북-미 대화도 추진되는 가운데 북핵 협상 관련 외교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북한 측의 반발을 우려해 꺼내지 않았으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검토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

낸시 하이킨 감독, 영화 '김정일리아' 제작(10.23)

- 지난 1월 미국 독립영화제 선댄스 영화제에 다큐멘터리 '김정일리아'(김정일花)를 출품했던 하이킨 감독은 2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할 목적으로 이름 붙인 꽃인 '김정일리아'를 제목으로 선택했다”고 언급
 - 영화 주제는 북한의 강제수용소 생활과 개인송배로, 강제수용소를 탈출한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수만 명의 북한 인민들이 정치재교육 명분 아래 강제수용소에서 고문과 기아, 질병 등에 시달리며 중노동을 하는 현실을 보여주려는 것이 제작 의도

미국,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9년째 지정(10.26)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얀마,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8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지정함.
 - 북한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9년째 연속 종교탄압국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조사기간에 북한에서 극도로 빈약한 종교자유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지적
 - 보고서는 통일연구원 『2009 북한인권백서』를 인용해 북한이 대외 선전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승인된 종교 단체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의 종교집회장소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소개
 - 국무부는 1998년부터 미 의회에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매년 9~10월 보고서 발표 뒤 해당국의 개선 여부 등을 반영해 다음해 초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을 공식 지정

미국 국무 차관보, 북한인권 6자회담 의제화 필요성 제기(10.27)

- 마이클 포스너 미국 국무부 민주·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26일 북한의 인권 상황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를 6자회담 내에서 의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세계 종교자유보고서 발표에 맞춰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국무부와 의회가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
 - “북한의 인권문제를 6자회담과 더 광범위한 정치문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 라면서도 인권문제 의제화를 강조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중국에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11.5)

-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후보자는 임명 시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추방 및 강제 복송 중단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킹 후보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자를 추방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아야 할 것 등 협약 준수 의무가 있다고 상기시키고, 망명 희망 탈북자들의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접근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
 - 또 탈북자들의 미국 내 정착을 비롯해 망명희망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인권침해 국가”라고 규정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대북방송 확대를 통한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제시
 -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전쟁포로 및 납치자, 일본의 납치자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미국의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을 다짐

휴먼라이츠워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 촉구(11.17)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아시아를 순방 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해 “한국에 가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함.
 - HRW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공개처형, 수감시설 남용,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탈북자 처벌, 기본적 노동권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
 - 특히 중국이 탈북자를 검거하고 북한에 송환하는 대신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 탈북자들에게 피난처와 신변보호를 제공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
 - 또 HRW는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탈북자들을 위한 생명기금’ 등 인권 단체와 함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적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힘.

미국, 북한인권특사 인준안 상원외교위 통과(11.19)

-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17일(현지 시간) 통과함에 따라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처리되는대로 공식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 북한인권특사는 국무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와 함께 동아시아태평양국(EAP)의 '대북정책과'에 소속

미국 상원, 북한인권특사 만장일치로 인준(AP 통신, 11.23)

-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후보자 인준안이 미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함.
 - 킹 특사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인권침해 국가”로 규정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의 국군포로와 일본 납북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중국이 탈북자 추방과 강제 복송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미국, 유엔에 북한인권에 대한 면밀한 조사 촉구(12.7)

- 미국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를 촉구함.
 - 로버트 킹 미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사법에 따르지 않는 처형, 고문, 교도소 및 강제노동수용소의 인권침해, 여자 및 어린이들의 학대 등의 보고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 그는 “북한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 독립적인 인권기관을 창설하고 외부 조사관들이 북한의 구금시설과 인권침해 현장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
 -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주 보편적 정례검토회의(UPR)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평가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상황 깊이 우려(12.8)

- 미국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킹 특사는 이번 회의(UPR)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유엔 관계자, 정부, 비정부기구 대표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북한은 억압적인 체제”라며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을 지속하는 한 그들이 현재 자초하고 있는 고립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
-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 미국뿐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다양한 양자 대화를 가지게 된다면 북한은 고립을 종식시키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나. 유럽연합과 기타 국가

사르코지, 북한 특사에 자크 랑 임명(10.1)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자크 랑 하원의원(전 문화부장관)을 북한문제 특사로 임명했다고 엘리제궁이 성명에서 밝힘.
 - 성명은 “프랑스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자크 랑 의원이 상황을 검토할 것”이며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랑 특사는 6자회담 관련국 방문을 마친 뒤 상황분석 결과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

북한-스웨덴 인권대화(10.14)

- 스웨덴은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최근 북한과 인권문제 대화를 갖고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고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면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등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라르스 바리의 주한 스웨덴 대사가 14일 밝힘.
 - 바리의 대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동아시아 인권레짐과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장에서 “지난 12일 북한 외무성의 김춘국 유럽담당 국장이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을 방문해 양국 간 인권 대화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힘.
 - 바리의 대사는 스웨덴측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의 방북 조사 허용을 촉구”했다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도 논의했고 북한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권관련 부문을 교육·훈련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북한 관계자들을 초청, 시장경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 바리의 대사는 북한이 EU의 유엔 대북인권결의 주도에 반발, EU와 인권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북한 지도부가 대북인권결의에 신경쓰고 있다는 증거이며, 대북인권결의를 지속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

- 스웨덴은 구체적 인권 상황 개선을 추구하므로 북한에 위협감이 없어 오랫동안 북한과 관계를 맺고 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해 올 수 있었다고 강조

이코노미스트, 북한인권실태 보도·비판(10.24)

- 국제사회가 북한의 잔인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못 본 체하고 있다고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구상의 지옥(Hell on Earth)’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보도하며 비판함.
 - 이 잡지는 ‘좋은벗들’의 소식을 인용, 함경남도 원산 부근 주민의 70% 이상은 풀을 섞은 옥수수 죽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강원도 산간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래 최대 식량부족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
 - 사회주의적 생산 강화와 2012년 강성대국 진입 명분의 ‘150일 전투’로 인해 농민들은 작은 토지조차 빼앗겼다고 지적
 - “암시장 활동, 줌도둑, 심지어 먹을 것을 구하러 떠도는 사람 등 잡범을 수용하는 노동수용소가 급증했다”고 보도
 - 이 잡지는 “문제는 북한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정권교체는 아예 불가능하고 가장 큰 대북지렛대를 지닌 중국은 비핵화보다 정권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
 - 또 “국가가 만들어낸 현실이 아닌 진짜 현실을 알려줄 대북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소련의 붕괴를 도왔던 방식이 북한사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캐나다, 탈북자 난민 인정 급증(RFA, 10.30)

- 캐나다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가 늘어나 2009년에 모두 5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밝혀짐.
 -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분기별 보고서를 인용해 “올 상반기에 북한이탈주민 37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7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탈주민 15명이 추가로 난민 지위를 받았다”고 전함.
 - 2008년에 난민 인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7명이며,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에는 각각 한 명씩이었음.
 - 캐나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 인정이 늘어난 것은 캐나다 정부와 의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프랑스 대북특사 자크 랑, “북한, 인권교류 제안 수용” 언급(11.13)

- 프랑스 대북특사인 자크 랑 하원의원은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교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언급함.
 - 랑 의원은 방북 후 베이징에 도착한 뒤 프랑스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이 특별한 제스처를 취했다”면서 “프랑스와 인권 문제를 교류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전함.
 - 방북 기간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의춘 외상 등 북한 관리들과 수교 문제 등 여러 이슈로 총 10여 시간 가량 대화
 - 그러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음.
 - 그는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경우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이슈별로 순차적 접근을 강조

‘세계 인권의 날’ 일본·영국서 북한 규탄 행사(12.10)

-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인권단체연합인 ‘모든 북녘 동포들을 위한 자유와 생명 2009’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석방과 김정일 ICC(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9일에는 일본 도쿄 니시신주쿠에서 북한인권보호를 위한 거리시위가 개최되며 영국 런던에서도 2000여명이 참여하는 촛불시위 개최

다. 한국

통일부 장관,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주민 돕겠다”고 언급(9.16)

- 현인택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 세미나에 참석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힘.
 - 특히 “북한의 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차원의 물자 지원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는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라고 언급
 - 또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외면해야 할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와 함께 같은 민족으로서의 도의적 책무”라고 강조
 -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문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모든 인도적 문제도 궁극적으로 보면 인권 문제”라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전략적 차원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구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

- 그는 “북한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방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

정부,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보조금 지원(9.23)

- 정부가 오는 25일 서울에서 국내 민간단체 주최로 열리는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보조금을 지원함.
 - 정부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2009 북한인권 국제회의’와 관련, 행사 주최 측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측에 보조금 3천 500만원을 지원
 - 북한인권 국제회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2005년부터 매년 국내외 민간단체들 주도로 서울, 워싱턴, 로마, 브뤼셀 등지에서 개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자크 랑 프랑스 대북특사와 회동 예정(10.4)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프랑스의 대북특사인 자크 랑 의원이 7일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함.
 - 랑 의원은 6자회담 참여국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으로, 6일 한국을 방문 옛새 동안 체류할 예정
 - 외교소식통은 “프랑스는 현재 유럽연합(EU) 내에서 에스토니아와 함께 북한과의 수교를 거부하고 있는 국가”라며 “북핵 문제와 북한 내 인권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수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함.

정부, 북한 정치범수용소 위치-인원-실태 첫 공식 확인(10.17)

- 북한이 평남 개천을 비롯한 6곳에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정치범 15만4,0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정부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 보고서에서 확인
 - 수용소 위치와 현재 수용인원은 ▲평남 개천(14호, 1만5,000명 수용) ▲함남 요덕(15호, 5만 명) ▲함북 화성(16호, 1만5,000명) ▲평남 북창(18호, 1만9,000명)

- ▲함북 회령(22호, 5만 명) ▲함북 청진(25호, 5,000명) 등으로, 수용소는 번호와 함께 관리소로 불림.
- 요덕 수용소는 일정 기간을 거쳐 심사 후 출소할 수 있는 ‘혁명화 구역’ 과 사망할 때까지 종신 수용되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5곳은 모두 종신 수감 시설
- 북한은 2000년 이전까지 총 10개의 정치범수용소를 운용했지만 ▲평북 천마(11호) ▲함남 단천(21호) ▲함남 덕성(23호) ▲자강 동신(24호) 4곳을 폐쇄
- 수용소 내에서는 기본적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수감된 정치범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강제 노동에 동원되며 의료혜택도 전혀 제공받지 못한 채 하루 100~200g의 급식을 받음.

박선영 의원, ‘북한인권개선특위 설치’ 제안(10.26)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국군 포로 가족을 강제복송하고 고령의 국군포로를 수감하는 등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 노력을 위해 외통위 산하에 북한인권개선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회의 보편적 정례검토회의(UPR)에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외통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반을 파견해 줄 것을 요구

황우여 의원 등, 태국서 탈북자 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개최(RFA, 11.26)

-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제6차 총회가 27~29일 사흘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함.
- 총회에서는 전 세계 탈북자 실태와 탈북자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남북 피해자 구제 노력 및 이산가족 상봉, 중국 내 탈북자 자녀 대책, 북한 등 아시아 전역의 인권 증진 방안 등을 논의
- 이번 총회에는 공동 상임의장인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과 태국의 티엠 차라스 의원, 몽골의 군달라이 람자브 의원, 미국의 에드 로이스 의원, 일본의 마사하루 나카가와 의원 등이 참석

북한인권대사 신설 국회 의원입법 추진(11.27)

- 북한주민과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 상황과 증진 방안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북한인권법안이 12월 초 처리될 예정이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한나라당)은 “북한인권기본계획과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축조심의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힘.
 -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은 이전 정부에서 북한을 자극할 뿐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음.

국제의원연맹,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촉구(11.28)

-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상임공동대표: 황우여 의원)은 태국 치앙마이 머큐어호텔에서 제6차 정기 총회를 열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 공동선언문은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과 성의를 다할 것을 요청” 하였으며 “북한정부가 북한주민에게 더 이상 비인간적 처벌이나 폭력을 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
 - 또한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전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의회는 유엔과 협력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중국이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을 중단해야 하며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고문과 구금, 공개처형 중단 ▲강제 납북자에 대한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 ▲6자 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 등을 촉구

2. 유엔과 국제협력

국제앰네스티, 북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지속(7.22)

-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말 이후 수백만 명이 최악의 식량 부족에 직면했고,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 고문, 기타 학대를 당함.

-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자의적인 구금과 사형,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의 심각한 제한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지속
- 북한은 여전히 독립적인 인권 감시요원들의 입국을 거부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인권 상황 심각(9.4)

- 비릿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식량 부족과 공개 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독히 나쁘다(abysmal)' 고 밝힘.
 - 그는 이날 회람된 유엔 총회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독히 나쁜 상태”라면서 2008~2009년 상반기의 북한인권 상황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
 - 평가 근거로 북한당국의 주민통제는 지속된 반면, 6자회담 표류와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된 점을 지적
 - 또 북한 정권이 기본적 인권을 일상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 축소로 원조단체의 도움을 받는 북한주민의 수도 2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
 - 그는 북한 정권에 ▲870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에게 식량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타지로 망명하려는 자를 처벌하지 말 것 ▲공개 처형을 중지할 것 ▲국방예산을 사회 분야 예산으로 전용할 것 ▲민주적 절차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
 - 또 국제사회에 북한이 '선군정치' 대신 '인민우선정치'를 택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

유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 공개(9.4)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함.
 - 보고서는 북한은 2차 핵실험 등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권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약 87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유엔은 북한정부에 국제적 식량지원의 수용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

- 한편 보고서는 탈북 후에 강제 송환된 주민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공개처형과 고문 등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요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 식량난 심각(10.2)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천400만 북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식량난으로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반 총장은 이날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식량난과 형클어진 보건 체계, 안전한 식음료의 부족 등으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 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 반 총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grave)’ 수준이라고 우려
 - 지난해 12월 발표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공동 보고서는 올해 북한 인구 가운데 90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기근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
 - 지난 7월 WFP는 60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5억 400만 달러의 기금이 필요하지만, 당시까지 7천 500만 달러 밖에 걷히지 않았다고 밝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몽골 북한 노동자 인권 보장” 촉구(10.9)

- 몽골 망명을 원하는 탈북자들에게 인간적 처우와 은신처를 제공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몽골 정부에 촉구함.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함께 몽골 거주 탈북자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합당한 보상, 안전한 노동 환경, 수입과 자산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중간착취 대상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그는 “북한과 몽골은 2007년에 ‘노동력 교류’ 협정을 맺고 2008년 의정서를 교환했으나, 몽골의 경기 불황으로 인한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
 - 그는 “현재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수백 명에 불과하지만, 몽골이 유엔 이주노동자국제협약에 가입하고, 북한에서 이주해 온 노동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

유엔서 북한인권 문제 논란(10.22)

-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국제사회의 인권과 사회 분야 담당 소위원회)에서 “북한주민들은 식량부족과 공개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함.
 -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6자회담이 표류하고 국제사회의 원조가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 역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
 - 북한 정권에 대해 공개처형 중지 등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이 선군정치 대신 인민우선정치를 택해 시민들에게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
 -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회의 발언을 통해 “적대적인 세력이 작성했고,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 문건인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반발
 - 박덕훈은 “북한의 인권제도는 무상 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우월하다”고 역시 주장
 - 미국 대표는 “인권은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라면서 “북한이 선군정치를 바꿔서 국제사회가 부응하는 방향으로 인권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접국들이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불응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을 당부
 - 일본 대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진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북한, 젊은 여성 바지 착용·자전거 이용 금지(AFP, 10.26)

- 북한당국이 여성들의 암시장에서의 ‘보따리 장사’를 막기 위해 49세 미만 여성들에게는 바지 착용과 자전거 이용을 금지했다고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힘.
 - 그는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식량배급권을 통한 주민 통제력이 암시장 확산으로 약화하는 것을 우려한 북한당국자들이 올해 들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
 - 또 “북한에서 남자들은 광산 등 정부가 지정한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이 집 근처에서 몰래 경작한 식료품들을 암시장에 내다팔아 식량배급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당국의 집중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

유엔에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한국 공동제안(10.31)

- 30일(현지시간)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제안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 한국과 미국 등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 절차에 진입함.
 -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상정된 뒤 11월 20일을 전후해 표결을 통해 채택될 전망
 -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12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의 유엔 회원국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인 만큼 유엔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등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침해의 즉각적 중단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에 대한 협조,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2008년 결의와 비슷한 내용 포함
 - 특히 이번에는 인도주의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
 -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대북인권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표결에서 2005년 기권, 2006년 찬성, 2007년 기권을 했고, 2008년에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11.19)

-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됨.
 -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
 -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측은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
 - 이번 북한 인권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음.
 - 특히 이번 결의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면서 탈북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

- 이날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는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한다(categorically reject)” 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일본과 EU가 인권문제를 정치화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

※ 대북인권결의안 부록 참조

유엔, 북한 이산가족·아동기아 문제 집중질의(12.2)

- 12월 7일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회원국들은 북한의 이산가족과 어린이 기아, 강제송환 탈북자 처리, 강제 수용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함.
 - 한국과 일본, 독일, 아르헨티나, 체코, 덴마크, 라트비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10개국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질의서 제출
 - 사전질의서에서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을 허용하고, 상봉을 정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1차적 관심사”라며 국군포로를 포함한 납북자, 이산가족 상봉, 실종자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질의
 - 또 “북한정부는 유엔보고서에서 거주와 여행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밝혔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돼 반역자로 간주되고 심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제송환 탈북자의 숫자 및 차별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 제시를 요구
 - 이와 함께 한국은 지원된 식량의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엔 기구와 인권단체들의 접근권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
 - 일본은 “북한은 일본인 납치에 대한 재조사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위성사진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와 노동수용소를 비롯한 다양한 강제수용소가 존재하는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
 - 독일은 북한 어린이들의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 등 생존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했고, 덴마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준군사조직에 가입시키는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
 - 스웨덴도 아동권리와 기아, 사법부 독립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문제를

제기했고, 스위스는 이산가족 상봉과 통신, 서신교환 허용을 촉구

-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2006년 6월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로, 192개의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받게 되며, 한국은 작년 5월 두 번째 회기 대상그룹에 속해 192개국 가운데 24번째로 심의를 받았고, 북한은 여섯 번째 회기 대상그룹에 속해 90번째로 심의를 받게 됨.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12.4)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7일 실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탈북자, 강제수용소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함.
 - 국제사회가 북한 내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와 투명한 배분, 탈북자 인권, 감옥 등 수용시설 현대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관련 위원회의 북한 방문 허용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유엔, 북한인권, 법규와 현실 불일치 지적(12.7)

-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인권 관련 법규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등에 실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함.
 - 이날 질의에 나선 50여개 국가 가운데 대다수가 북한의 아동 기아와 이산가족, 탈북자에 대한 과중한 처벌, 정치범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고문, 사법권 종속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인권 상황에 대한 투명성 부재를 지적
 -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이성주 대사는 “북한당국이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에 참여하고, 올 초 헌법에 인권 존중과 보호를 명기하는 등 긍정적 노력이 있었음을 주목한다”면서도 “북한 내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조직적인 침해가 있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힘.
 - 특히 “인권 관련 법조문과 실질적인 집행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있음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인권과 자유권을 담보할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한반도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과 전쟁포로, 납북자 등 ‘3대 현안’의 해결을 위한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통신, 상봉 정례화 등을 촉구

- 첫 질의에 나선 일본 측은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납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공개처형 제도와 탈북자 처벌, 식량권 보장 등을 지적
- 미국 역시 어린이에 대한 강제노동과 준군사조직 동원, 수용시설 내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구류시설 내 강제노역 문제를 제기했고, 벨기에에는 정치범 감금 시설의 존재 및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부재 문제를 지적
- 특히 미국과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서방국가들은 유엔기구 및 구호단체들이 북한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식량 및 의약품 원조를 투명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공개하고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
- 이에 대해 북한대표단은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리철 대사는 연설문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부당한 ‘결의’가 강행 채택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인정도 접수도 하지 않으며, 인권의 정치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로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

3. NGO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9.24)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2009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는 2005년부터 매년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주도로 서울, 워싱턴, 로마, 브뤼셀 등지에서 개최되었음.
 - 24일에는 북한인권전문가워크숍이 ‘북한인권운동 1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과 ‘북한인권 개선 전략과 실천적 접근방안’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진행
 - 25일에는 북한인권 국제회의가 열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협력방안’, ‘포스트 김정일 시대와 한반도의 미래’ 등을 논의

탈북단체, 북한에 ‘라디오 풍선’ 날리기 개최 예정(9.30)

-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0월 초에 전단 살포용 풍선에 라디오 300대와 북한 돈 5천 원짜리를 함께 넣어 북한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가 밝힘.

- 박 대표는 내달 방한하는 미국 디펜스포럼의 수잔 솔티 회장과 함께 5일부터 7일 사이 파주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대북 라디오 보내기' 행사를 열 것이라고 언급
- 그는 이번에 라디오 날려보내기가 성공하면 올해 중 5~6천대를 보낼 계획

대북인권단체, 제네바서 북한 인권실태 정보 제공(10.1)

-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대북인권 비정부기구(NGO) 합동대표단(공동단장: 허만호 경북대 교수와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이명숙 변호사)이 12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회의(UPR)를 앞두고 사전에 각국 외교관계자들과 현지 언론을 초청해, 북한인권 관련 국제법 위반실태에 관한 구체적 정보와 증거들을 제공하기로 함.
 -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 동안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사(ICRC) 등을 방문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국제법의 보편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활동을 요청할 예정
 - 최근 탈북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정치범수용소와 현대판노예제 실태, 고문실태, 아동권과 인도지원품 전용 실태, 여성권과 성차별 실태 등 4개의 주제별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인권 상황을 알릴 예정
 - 7일 오전 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합동 브리핑을 개최 하며, 지난 2007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김미란(가명)씨가 참석해 북한인권 상황을 증언

대북방송, “한국행 도운 북한주민 4명 총살형” 주장(10.5)

- 함경북도 무산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사람들을 도와준 주민 4명이 총살형을 당했다고 대북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이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5일 주장함.
 - 자유북한방송은 “지난 9월 29일 오후 1시쯤 함경북도 무산군 보안서가 무산군 남산장마당 주변에서 공개재판을 열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손전화로 연락하고 한국에 가려던 사람들을 도와준 죄로, 남·여 4명을 공개처형 했다”고 보도
 - 북한당국은 최근 국경지역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손전화 사용과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수잔 솔티(디펜스포럼 대표) 한국 방문(10.6)

- 미국 디펜스포럼 수잔 솔티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고, 애드벌룬을 이용한 대북 라디오 보내기 행사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대북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음.
 - 10월 3~11일 간 한국에 머물면서 북한인권 문제 강의, 북한이탈주민 면담, '북녘 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구국기도회'와 애드벌룬을 이용한 '대북 라디오 보내기' 행사 등에 참여
 - 또 북한민주화위원회 황장엽 위원장, 제성호 인권대사 등과 면담
 - 한편 수잔 솔티 대표는 내년 4월에 서울에서 진행될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해 워싱턴과 서울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준비 위원회를 가동시킬 계획

북한인권 단체, 김정일 국제형사재판 회부 서명운동(10.9)

-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0여개 북한인권 단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임.
 - 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서명운동을 전개
 - 이들 단체는 "김정일 정권은 강제수용소에서 20만의 정치범을 학살하고 3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을 기아로 굶어죽게 했다"며 "남북관계가 조금 경색되더라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

탈북자단체, 대북 전단·라디오 날리기 실패(10.10)

-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탈북자 단체,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은 10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과 소형 라디오를 대형 풍선 5개에 매달아 날려 보냈지만 남쪽으로 부는 바람 탓에 북한으로 보내는데 실패함.
 - 이들은 '조선로동당 간부들에게'라는 제목의 전단 7만장과 대북방송 청취 라디오 300대, 북한 돈 5천원권 500장을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음.
 - 행사에는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잔 솔티 대표를 비롯해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국민행동본부,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이 참여

‘오늘의 북한소식’ 지, ‘북한 시장, 위축됐지만 지속’ 평가(10.14)

-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이사장 법륜 스님) 발행 ‘오늘의 북한소식’은 지령 300호(13일) 특집호에서 2008년과 2009년 9월까지 북한의 식량, 주민생활, 시장 동향 등을 정리해 소개함.
 - 소식지는 북한의 2009년 쌀 가격이 상반기에는 “대체로 1천800~2천원대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8월 말부터 2천500~2천600원대로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추수 전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또 북한당국이 지난 6월 북한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인 평양 인근의 평성종합시장을 폐쇄하고 최근 ‘150일 전투’로 인해 장사 시간이 단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전언

교회·기독교NGO, “북녘 동포에 자유와 생명을” 구국 기도회·세미나 개최 예정(10.20)

- 기독교NGO 글로벌정의기도네트워크는 다음달 7~8일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한 대규모 연합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예수전도단 월요중보모임, 지구촌교회와 할렐루야교회 북한선교위원회, 자유와 생명운동,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연합회, 탈북자동지회 등이 참가
 - 서울 영락교회와 새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등은 다음달 9일 임진각 일대에서 북한 선교단체와 함께 남북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구국 기도회를 개최
 - 기독교 탈북자 미주 모임인 고향선교회는 유엔의 날인 오는 24일 정오 ‘주여! 북한을 구원하소서’라는 주제로 미국 시애틀 다운타운 스페이스니들 탐 앞에서 시위를 전개

국내외 NGO, “김정일 국제법정(ICC) 세운다”(10.25)

- 국내외 100여개 NGO단체의 연합체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공개처형, 종교탄압, 납치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 행위 자행을 근거로 12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고 밝힘.
 -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국제외교안보포럼, 6·25국군포로가족회, 미주지역 국군포로송환추진위원회, 북한자유연대, 일본의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등 국내외 100여개 NGO들의 연합으로 지난 7월 출범
 - 이 위원회는 탈북자로 2004년 중국 국경지대에서 납북된 뒤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숙씨 사건, 2006년 공개 처형된 손정남씨 사건 등을 묶어서

제소할 방침이며, 정치범으로 수용소 생활을 하다 2007년 한국에 들어온 정광일 씨는 직접 증언대에 설 계획

-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피해 당사국이나 피해자 및 가족, 기소권을 가진 검사 등이며, 반인도범죄위는 납북자, 공개처형자, 종교탄압 피해자 가족들을 전면에 내세웠음.
- 반인도범죄위는 ‘제소→기소→재판→형 집행’ 절차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여론을 조성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북한의 인권탄압 현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 600쪽짜리 5권의 보충 자료 제작
- 반인도범죄위 도희훈 공동대표는 “유엔 결의 3704호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사, 체포, 인도 및 처벌에 대한 국제협조 원칙’에 따라 충분히 제소와 기소가 가능하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럴수록 부담을 갖는 쪽은 북한”이라고 주장

북한인권단체,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단체로 첫 선정(10.29)

-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단체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내정한 것으로 확인됨.
 - 국가인권위는 28일 대한민국 인권상 중 단체 부문인 ‘인권위원장 표창’ 수상 단체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선정했으며, 북한인권 관련 단체가 이 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 대한민국 인권상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10)을 기념해 국내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
 - 1999년 설립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정권에 대해 공개처형 중지와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을 요구해온 단체

탈북단체, 런던 북한대사관에 수감자명단 전달(11.4)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던 탈북자들이 요덕수용소 수감자 187명의 명단을 완성해 주영 북한대사관측에 전달함.
 - 요덕수용소에서 탈출한 정광일(46)씨와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 등은 4일 오전(현지 시간) 런던 소재 주영북한대사관을 찾아 187명의 명단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전달
 - 요덕수용소 수감자 명단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
 - 정치범수용소 생존자들로 구성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명의로 김정일 위원장

앞으로 쓴 편지에서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던 생존자를 일일이 인터뷰해 187명의 수감자 명단을 만들었다”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2006년까지 요덕 15호 수용소에 수감됐던 이들의 생사 여부”라고 강조

- 187명의 수감자 명부에는 이름, 성별, 나이, 전 직업, 출생지, 수감 시기, 수감 이유 등이 자세히 기록되었으며, 분석이 끝난 121명 가운데 85명은 생존, 26명은 사망, 7명은 처형된 것으로 추정
- 사망자 26명의 사인은 영양부족이 2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처형이 2명, 고문사가 1명
- 수감 사유는 탈북(34명), 노동당 및 김정일에 대한 모독(25명), 반동적 발언(11명), 뇌물수수(9명), 간첩행위(8명), 기밀누설(8명) 등으로 집계
- 수감자의 출생지는 함경도가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평양 23명, 남포 14명, 평안도 13명, 양강도·자강도 12명, 황해도 10명 등
- 탈북자들은 국제기독교단체인 기독교세계봉사회(CSW)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 웨스터민스트 의회 포트컬리스 하우스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 및 고문 실태를 증언했으며 의원들을 만나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

탈북자단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김정일 제소 계획(11.7)

- 탈북자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는 사단법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반(反) 인류범죄’ 용의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로 함.
 - 유럽을 방문 중인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일행은 6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를 방문, ICC검찰 관계자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소 문제 등을 논의
 - ICC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예비조사를 벌여 사건의 성립 여부, 관할권 여부 등을 고려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를 결정
 - 하 대표는 “북한이 로마조약 비준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ICC가 움직일 수 있다”고 언급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 개선 촉구’ 집회(11.7)

- 북한인권 및 탈북자 관련 49개 단체 모임인 ‘자유와 생명 2009’는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함.
 - 집회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잔인한 고문 등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국내외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 또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안의 통과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전개

반인도범죄조사위, ICC에 북한 조사 촉구(12.3)

-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인권 피해를 입은 150명의 탄원서를 발표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실상에 대한 조사를 촉구함.
 - 반인도범죄조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낸 피해자들은 모두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끔찍한 고문을 겪거나 옆에서 본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ICC가 가능한 빨리 북한의 실상을 조사하길 바란다”고 주장
 - 또 “이 탄원서를 ICC와 유엔 사무총장,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발송할 것”이라면서 “내년 목표는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
 - 기자회견에서는 탈북자 6명이 “수용소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고문도 받고 정치범수용소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 “사상이 다르다고 맞거나 탄압을 받았다”고 증언

시민단체, 헤이그 ICC에서 북한인권 고발(12.7)

-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북한 실상에 대한 예비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한다고 밝힘.
 - 반인도범죄조사위는 또 네덜란드 방문 기간 ‘북한의 반인도 범죄 중지와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전 세계 인권 운동가와 지식인 100인의 행동을 위한 고발장’도 ICC에 제출할 예정
 - 고발장에는 탈북자들의 인권 피해 내용과 이러한 사례들이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이 정의한 ‘인도에 반한 죄(7조)’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북한인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
 - 9일에는 헤이그 벨 에어(Bel Air)호텔에서 ICC 관계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탈북자 2명(남녀 각 1명)이 북한 수용소에서 당했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례에 대해 증언할 예정

‘세계인권 날’ 일본·영국서 북한 규탄 행사(12.10)

-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인권단체연합인 ‘모든 북녘 동포들을 위한 자유와 생명 2009’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석방과 김정일 ICC 제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북한인권단체, 정부·UN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12.9)

- 북한구원운동, 기독교사회책임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와 유엔(UN)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함.
 - 이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통제와 구금을 즉각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
 - 또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인도적인 문제”라면서 “한국정부와 유엔을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수잔 솔티, 북한주민에 세계인권선언 알려야 함을 촉구(12.10)

- 수잔 솔티 미국 디펜스포럼 대표는 9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주민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알려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일을 해달라”고 촉구함.
 - 서한에서 그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본권과 인권선언의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또 “탈북자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북 라디오 방송 및 풍선을 이용한 전단 살포 등의 방법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언급

4. 분석 및 평가

미국, 북한인권특사 임명으로 대북정책팀 정비 완료

-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던 북한인권특사에 북한 인권 전문가인 로버트 킹을 임명, 대북정책 특별대표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대북정책팀의 구성을 완료함.

- 상원 본회의 인준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 북한인권특사를 대사급의 상근직으로 격상·제도화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를 지난 시기보다 중시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로버트 킹 특사는 톰 랜토스 전 하원외교위원장을 도와 미국의 「북한 인권법」 작성·통과에 기여
 - 북한인권특사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팀의 일원으로 활동, 북핵문제, 미·북대화, 대북제재 등과 함께 북한인권이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설정되고 영향 요소가 될 가능성이 증대

미국,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외교적 압박 지속

-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는 계속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09년 상반기에 발간된 국무부의 ‘2008 인권보고서’에 이어 하반기에 발간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태로 평가
 - 북한은 2001년 이래 9년 연속적으로 ‘종교자유 우려국’(CPC)으로 지정되어 종교탄압국이라는 불명예의 굴레 지속
-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외교적인 이슈로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음.
 - 국무부 마이클 포스너 민주·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종교자유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를 6자회담 내에서 의제화해야 한다는 입장 피력
 -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더욱 면밀한 조사 촉구

유럽연합(EU), 북한인권 문제 등 북한에 대한 관심 지속

- 유럽연합국가 중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2개국 중 하나인 프랑스는 자크 랑 하원 의원(전 문화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임명,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모색함.
 - 자크 랑 대북특사는 한국 등 6자회담 참여국을 방문한 후,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의춘 외무상 등과 면담하고 수교문제, 북핵문제, 북한인권, 대북지원 등 양자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

- 프랑스는 랑 특사의 방북 결과를 검토한 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이나, 북핵문제, 북한인권 문제 등에서의 진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북한에 상주 대사관을 둔 스웨덴은 유럽연합 의장국으로서 북한과 인권문제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에 대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함.
 - 국장급 수준의 북한·스웨덴 인권대화에서 스웨덴 측은 북한 측에 대해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촉구
 - 양측은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도 협의

유엔,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지속함.
 -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독히 나쁜(abysmal)’ 상태
 - 특히 2009년도에는 북한당국의 주민 통제는 지속된 반면, 6자회담 표류,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식량난으로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이에 따라서 유엔 총회에서는 2009년에도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대북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래 5년 연속으로 채택
-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유엔본부 건물에서 2009년 12월 7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진행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함.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질의에 나선 50여개 나라 중 대다수가 북한의 아동 기아와 이산가족, 탈북자에 대한 과중한 처벌, 정치범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고문, 사법권 중속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인권 상황에 대한 투명성 부재를 지적
 - 북한 대표단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가 부당하며 북한은 이를 인정도 접수도 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으나, UPR 참여 등 국제인권 규약에 대한 부분적 반응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외교적 영향도 작용

국내외 인권 NGO,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등 비정부기구(NGO)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이 보다 강화·적극화되었음.
 -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는데, 동 회의에 통일부장관,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 관련 NGO 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지원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북한인권 상황 관련 UPR 회의를 앞두고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 각국 외교공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등 국제기구에 대해 북한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압력을 요청
 - 국내외 100여개 NGO 연합단체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해 국내 서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세미나와 ICC 방문 등의 활동 전개
- 이와 함께 탈북자단체의 ‘풍선 날리기’ 행사가 시도되고, ‘좋은벗들’, 열린북한방송 등의 기관에 의한 북한 관련 온라인 소식지 활동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 정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접근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2008년에 이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함.
 - 이러한 입장에서 NGO 단체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처음으로 보조금을 지원



1. 미국에 대한 반응	35
2. 일본에 대한 반응	36
3. 유엔에 대한 반응	37
4. 남한에 대한 반응	39
5. 분석 및 평가	41

1. 미국에 대한 반응

로동신문, 미국의 인권외교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이라고 비난(10.8)

- 북한인권담당특사로 로버트 킹을 임명한 것에 대해 미국의 인권외교는 다른 나라의 내정간섭 및 지배를 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

로동신문,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11.4)

-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등 8개국을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엄중한 반복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
 - 미국이 다른 국가의 종교문제를 언급하며 내정간섭과 압력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종교를 명분으로 북한의 영상을 흐려 놓고 대북고립 압살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 책동’이라고 비난
- 오히려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역공
 - “미국식생활양식을 비판하거나 받아 물지 않는 종교적 견해와 신앙에 대해 문제시하고 있으며 반동적인 정치에 불만을 품고있는 종교인들을 박해, 체포, 살해” 한다고 주장
- 미국이 《종교재판관》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의 종교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적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난(로동신문, 11.11)

민주조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 비난(12.1)

- 미국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였지만 미국이 말하는 인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 “미국이 아무리 인권면사포를 쓰고 중 념불외우듯 인권을 운운해도 세계최대의 인권교살자, 인권범죄국으로서의 정체를 가리울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도덕적저열성과 파렴치성만을 드러낼뿐이다” 라고 강변
 - 유엔현장에 민족자결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권이 국권에 의해 보장되는데, 미국은 다른 국가의 주권을 유린한다고 비난

로동신문, 미국이 극심한 인권유린자라고 비판(12.2)

- 미국이 연례각국인권보고서에서 다른 국가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면서 인권재판관 행세를 통해 내정간섭적 비방중상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
 - 미국의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에서 여성수감자에게 야만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사례 등을 근거로 미국이 오히려 인권유린의 주범이라고 주장

2. 일본에 대한 반응

로동신문, 일본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반공화국 적대시광기라고 비난(7.22)

- 일본의 “북조선 핵활동이나 대량살륙무기 계획 및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나 설계, 제조 등과 관련되는 모든 지분을 규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차단시킨 조치라고 비난
 - 일본 당국은 7월 7일 북한선박을 비롯하여 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 화물검사를 하는 법률 통과
 - 일본 외무성은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자산이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모든 일본 내 금융기관에 요구
 - 문부과학성도 일본 내 모든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이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핵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교육을 금지시키는 조치
 - 일본의 대북제재조치들에 대해 북한은 비열하고 악랄한 행위라고 비난

로동신문, 일본을 “인신매매왕초 국가” 라고 비난(8.8)

- 유엔이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세계각국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임명한 관리가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라고 밝힌 것에 대해 비난
 - 일본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과거 일제의 성노예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추궁과 청산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과거 반인륜적인 위안부 및 강제연행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촉구(8.14)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44차 회의에서 일본이 “성노예 범죄에 대한 법적해결 완료” 및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통한 충분한 지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언급
 - 일본이 북한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대북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고 발표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주도 비난(12.2)

- 일본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주도한 것에 대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인권 재판관’으로 둔갑했다”고 비난

로동신문, 일본이 인권유린국이라고 비난(12.22)

-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북한주민과 아시아인들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인권유린국가라고 비난
 -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을 통한 인권만행을 자행했다고 비난

3. 유엔에 대한 반응

중앙방송·조선중앙통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시정책 철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10.18)

- 유엔총회 제64차 회의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대표는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핵군축 문제는 초미의 문제로 되고 있다며 북은 지구상에서 핵무기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로동신문, 제국주의의 인권공세 비난(10.28)

-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으로 매일 3,000여 명, 매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자본주의 세계의 인권문제를 비판
 -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인권문제는 도외시 한 채, 다른 나라들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고 비난
 - 특히, 유엔의 연례인권보고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적인 비방중상이라고 비판

민주조선·조선중앙통신, 유엔 총회 대북인권 제기 비난(11.4)

- 유엔총회 제64차 회의 제3위원회 회의 시 미·일 등 대북 인권문제 제기 관련 “우리(北)의 국제적 영상을 깎아내리고 저들의 불순한 반복 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 전략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발
 - “서방의 인권개념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화국에는 서방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또 존재할수도 없다”고 강변(민주조선)
- 유엔총회 대북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낡은 질서를 유지하며, 내정간섭의 무제한한 자유를 얻으려는 목적”이라며 “저들의 인권공세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조선중앙통신)

북 외무성 대변인,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비난(11.20)

- 외무성 대변인은 제64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판에 박힌 정치적 모략책동, 적대행위의 불법무도성”이므로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조선중앙통신)
 - “미국이 직접 나서서 EU, 일본 등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온갖 허위와 날조로 우리 제도를 모독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날강도적 문서를 또다시 조작”했다고 주장
 - ‘인권옹호’의 명분 아래 내정간섭을 하며 북한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변경하려는 미국과 추종세력이 조작해낸 ‘결의’이기 때문에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

4. 남한에 대한 반응

민주조선,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비난(7.17)

- 입법, 사법, 행정의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구로 활동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폭 축소한 것은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난

조선신보, 남북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소식을 통해 겨레의 변함없는 통일의지를 확인했다고 보도(9.29)

- 남한은 인도주의 문제해결과 남북관계의 개선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현 시점에서 북측을 자극하는 언동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
 -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6·15와 10·4공동선언의 이행과정으로 되어야 이산가족의 앞날을 담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남한 당국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지적(조선신보, 10.1)

로동신문, 남한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비난(11.23)

- 남한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동족대결을 인권문제로 확대시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로동신문)
 - 남한이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언어도단으로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유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정치적 흥계”라고 비난 (민주조선, 11.24)
 - “동족대결을 인권문제로 확대시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으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평양방송, 11.29)

민주조선, 한나라당 북한인권법 채택 시도 비난(12.3)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반북 ‘인권’ 소동으로 체제대결을 격화시키는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 집권위기 모면용 모략극”이라고 비난(로동신문, 12.3)
 - “동족간의 체제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통일대결 책동”이라고 비난(평양방송, 12.4)

- “반북 모략책동, 엄중한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북남관계 개선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조선중앙통신, 12.5)
-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국회채택 움직임 관련 “반북 인권모략소동, 언어도단”이라고 반발
- “기독교총연합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반공화국모략단체들을 부추겨 인권촉구 기도회니, 인권주간설정이니, 사진전시회니 하는 따위의 모략놀음”을 벌였다고 비난(평양방송, 12.8)
- 김용술 우크라이나 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이 북한인권법 채택 시도 등 남한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 규탄 담화 발표(조선중앙통신, 12.12)
- 카자흐스탄 고려인통일연합회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 규탄 담화 발표(조선중앙통신, 12.14)

로동신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 의지 비난(12.11)

- 인도주의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국군포로니 납북자문제니 하는 것들을 들고 나와 인도적 문제들을 불순한 정치적 통략물로 전락”시키려는 책동이라고 비난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실제 없는 유령에 불과하다고 주장
 - 독일식으로 현물과 거래하자는 방안에 대해 장사꾼 같은 흥정이라고 비난

로동신문, 통일부 등 남한 정부의 인권제기 반발(12.15)

- 통일부 등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반북대결 소동’ 강화로 규정하고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는 사라지고 정세는 파국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
 -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북한인권법 채택 시도 등에 대해 “동족대결을 《인권》 문제에도까지 확대시키고 북남관계를 더욱더 견잡을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기 위한 범죄적흉계의 발로”라고 비난

로동신문, 인권 제기가 남북관계 장애의 요인이라고 주장(12.25)

- 3월 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반공화국 인권쇼’에 편승한 남한 정부가 11월 북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고 국회에서 북인권법안 채택을 시도하는 것은 악화된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비난

5. 분석 및 평가

인권침해 사례 부각을 통한 인권문제 제기 지속

-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개별국가에 대해 오히려 인권유린국이라고 역공
 - 인권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일관되게 견지
 -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인권문제는 도외시 한 채, 다른 나라들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고 비난
 - 미국이 세계최대의 인권교살자, 인권범죄국이라고 주장
 - 유엔의 인신매매 상황조사에서 일본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밝힌 것을 근거로 비난
 - 일제의 반인륜적인 위안부의 성노예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추궁과 강제연행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지속 촉구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해 대북적대시정책 시각에서 반발 지속

-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대북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내정간섭과 지배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강력 반발
 - 북한인권재승인법안에 따라 정규직으로 승격된 북한인권특사 임명 반발
 -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속·지정되는 것에 대해 종교를 명분으로 하는 고립압살정책이라고 주장
 - 인권유린국인 미국이 인권재판관, 종교재판관 행세를 통해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일본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주도 비난

- 일본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주도한 것에 대해 인권유린국이 ‘인권 재판관’으로 위장했다고 비난
 -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주도하는 일본이 북한주민과 아시아인들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인권유린국가라고 비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

-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판에 박힌 정치적 모략책동”이므로 ‘전면 배격’ 한다는 주장 되풀이

- 미국과 추종세력이 조작해낸 ‘결의’이며 “불순한 반복 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전략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발

남한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해 남북관계 파탄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

-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동족대결을 인권 문제로 확대시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채택 움직임에 대해 “동족간의 체제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통일대결책동”이라고 비난
- 북한에 우호적인 고려인단체를 이용하여 남한정부 인권정책 비판



1. 탈북자	45
2. 납북자	62
3. 국군포로	65
4. 이산가족	68
5. 분석 및 평가	73

1. 탈북자

하나원, 개원 10주년 행사 개최(6.27)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교육수료생 60여명을 초청해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함.
 - 1999년 7월 8일 개원이래 14,595명이 사회적응 교육과정 수료

하나원 분원 양주로 이사, 규모 확대(6.28)

-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전기관인 하나원 분원(남성 전용)이 경기도 시흥에서 양주로 이사함.
 - 경기도 양주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에 마련된 분원은 현 시흥 분원(최대 100명 동시 교육가능)보다 확대된 규모(최대 250명 동시교육가능)임.

국민권익위원회, 탈북자 임대주택 해지규제 완화 권고(7.21)

-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일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2년간 계약해지가 금지된 탈북주민 임대주택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취업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함.
 - 개선안은 중·장년층 탈북주민에게 연령별 가산금을 지급하거나 현행 ‘4대 보험 가입업체’에 1년 이상 취업해야 지급되던 취업장려금을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 업체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자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 또한 ‘북한에서 농업계 고교에 1년 이상 재학한 자’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된 영농 정착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권고
 - ▲수도권 탈북주민 취업알선 전담인력 배치 및 년 1회 이상 취업설명회 개최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특성화 학교 건립(서울) ▲탈북주민 사망 시 남한 거주 상속인 대상 상속 순위 결정 특례 신설 등의 내용 포함

탈북자 4명, 중국 한국문화원에 진입, 신변보호 요청(7.28)

- 인권단체인 ‘북한인권국제연대’는 이날 오후 3시경 리모(29, 여)씨와 박모(26, 여)씨 등 탈북자 4명이 주중 한국문화원에 진입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힘.
 - 국제연대는 현재 행방불명된 탈북여성(23) 장모(6~7일 문화원 진입 신변보호

요청 무산)씨를 포함해 총 5명의 탈북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서를 작성해 문화원에 제출함.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원 보호요청을 확인하면서 “문화원은 외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탈북자를 보호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자진해서 돌아간 일이 있었다”고 밝힘.

캐나다, 2009년 상반기 탈북자 37명에 난민지위 부여(VOA, 7.28)

- 캐나다 정부가 2009년 상반기에 북한이탈주민 37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밝혀짐.
 - 캐나다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신청을 접수했지만, 4월부터 6월까지 짧은 기간에 21명을 한꺼번에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91명의 탈북자들이 캐나다 이민난민 당국으로부터 난민 지위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 받는 탈북자가 늘 것으로 전망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효(7.3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 거주나 농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를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30 개정)이 발효됨(7.31).
 -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10년 이상 해외 거주 북한이탈주민도 이 기간 동안 체류국에 억류되거나 도피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지방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상향 조정, 농촌 정착자 취업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지급 규정, 탈북청소년 대상 학교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미국 입국 탈북자, 미국정부 수용태도 비난(8.4)

- 7월 30일 워싱턴 DC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탈북자 관련 모임에서 미국 정착 탈북자들은 미국정부의 소극적인 수용태도를 비판함.
 - 미국의 수용에 감사하면서도, 미국입국을 위해서 장기간 동남아 국가에 체류해야하기 때문에 미국 입국을 포기하는 상황을 설명함.

- 1년 8개월 대기기간을 거쳐 미국에 입국한 김모씨는 “함께 있던 탈북자 중에는 생일을 세 차례나 A국 감옥에서 맞은 이도 있다”며 “당시 함께 수감돼 있으면서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던 탈북자 28명 중 8명만이 미국으로 왔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탈북자를 ‘최소한으로’ 받아들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30여개 탈북자단체, 협의체 구성 추진(8.7)

- 30여개 탈북자 단체들이 탈북자 정착 문제 해결 등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음.
 - ‘탈북자 대표 조직’임을 표방하면서 경쟁해온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와 탈북인단체총연합(회장 한창권)을 포함해 20개 발기 단체는 ‘탈북자와 북한의 미래를 준비하는 단체협의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 논의
 - ‘탈북자단체 전체모임 발기단체’는 ‘탈북자 단체장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탈북자들간, 탈북단체들간 연계를 긴밀히 하고 서로 상부상조해 통일위업이라는 지대한 목표를 향해 다 함께 매진할” 필요성 강조

북한인권단체,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촉구 국제시위 결의(RFA, 8.11)

- 전 세계 50여개 북한인권운동 단체로 구성된 ‘북한자유연합’이 9월 24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주요 도시에서 탈북난민을 구원하기 위한 국제시위를 벌이게 된다고 밝힘.
 - 미국 디펜스포럼의 수잔 솔티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오는 9월 24일 정오, 미국, 한국, 일본, 유럽의 주요 도시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을 강제 복송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연다”고 밝힘.
 - 솔티 대표는 “시위가 열리는 다음 달 24일은 중국이 1951년 유엔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조인한 날로 중국은 이 협약에 따라 탈북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

미국 이민연감, 2008년 탈북자 37명 입국 확인(8.15)

- 미 국토안보부가 1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8 회계연도 이민연감’에 따르면, 2008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인은 2만 2천 700여 명이며, 탈북자 37명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됨.

-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탈북자의 경우 2006년 9명, 2007년 22명, 2008년에는 37명으로 증가 추세
-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북한인은 2004년 72명, 2005년 60명, 2006년 75명, 2007년 50명, 2008년 34명

울포위츠 전(前) 세계은행 총재, “관련국이 탈북자 수용하는 ‘인도차이나 모델’이 바람직” (8.19)

- 조지 W 부시(Bush) 전 미 행정부의 핵심인사였던 울포위츠(Wolfowitz) 전 세계은행 총재가 탈북자 문제 해결사로 변신, 미 기업연구소(AEI)에서 세계적인 차원의 탈북자 구출 방안을 연구중임.
 - 지난 6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난민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인도차이나 모델’을 탈북자 문제에 적용, 관련국가들이 매년 2만 5000명씩, 10년 동안 25만 명을 받아들이자고 제안
 - 울포위츠 전 총재는 인도차이나 난민 구출이 성공적이었던 배경으로 “1차로 난민을 받아들인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과 이들이 영구히 정착한 국가와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함. 그 결과 미국에 120만 명, 캐나다·호주·프랑스에 각각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성공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고 주장

NY타임스, 미국 여기자 취재로 탈북자 위협초래(8.24)

- 최근 석방된 미국의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가 취재한 탈북자들의 자료가 탈북자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 송환의 정보로 이용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함.
 - 두 명의 여기자가 중국-북한 국경지대에서 북한군에 체포된 지 이틀만에 이들이 취재한 중국 내 탈북 아동들의 비밀 쉼터가 중국 공안의 급습을 받았다고 보도

광주·전남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개소(8.28)

- 광주·전남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하나센터’가 2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나무야 가구야’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
 - 5년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해온 ‘광주·전남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초기 정착지원, 진학지도, 건강증진사업, 문화체험, 취업지원 등의 역할 담당

태국, 탈북자 어린이 포함 10명 체포(VOA, 9.5)

- ‘미국의 소리’ 방송은 태국의 ‘TNA 통신’을 인용해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서 한국에 가려던 어린이 등이 포함된 탈북자 1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전함.
 - 탈북자들은 순찰 중이던 경찰 차량을 자신들을 태국 내륙지방으로 데려다 줄 안내원의 차량으로 오인하고 이 차량에 접근하다가 체포됐다고 보도

미국, ‘대북전문 사이트’ 중국 공안당국 문서 공개(9.13)

- 중국 경찰당국이 지난 2003년 10월 압록강에서 총격을 당한 56명의 탈북자 시신이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 이들 시신을 수습한 사실이 있었다는 중국 공안당국의 문건이 공개됨.
 - 연합뉴스가 12일 미국의 북한경제 관련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워치’에서 확인한 중국 지린(吉林)성 공안당국의 공문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2003년 10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북·중 접경지역 압록강에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탈북자 시신 56구 발견
 - 2003년 10월 7일자로 된 이 공문은 지린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長白) 조선족 자치구 공안국에 의해 작성됐으며, 10월 3일 오전 53구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이어 이튿날인 10월 4일 새벽 3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기술
 - 공문에는 “검시 결과, 사망자들은 모두 북한주민들이었고 56명(남자 36명, 여자 20명, 소년 5명과 소녀 2명 포함) 전원이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중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북한 국경수비대의 총격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기록

‘탈북자 구하기 행사’ 24일 10개국서 개최 예정(9.14)

- 중국내 탈북자들의 북한 강제송환 중단 등을 촉구하는 ‘탈북자 구하기’ 행사가 오는 24일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대북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잔 솔티 대표가 밝힘.
 - 솔티 대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호주에서 24일 정오를 기해 해당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중국의 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청원과 서한 등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소개
 - 특히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행동계획이 담긴 서한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전달할 계획

유엔, 난민지위 부여로 탈북자 미국 영주권 취득(9.16)

-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은 2007년 중국을 통해 탈북, UN의 도움으로 난민 신분 자격을 부여받고 입국한 최미경씨(34)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을 발급함.
 - 지난해 태국을 거쳐 입국한 첫 탈북자의 경우 영주권 수속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렸으나, 이번 최씨의 경우는 약 6개월만에 영주권이 승인되었기에 수속 기간이 그만큼 단축
 - 탈북난민의 경우 이민귀화국의 인터뷰 없이 통과되는 것이 보통이나, 최씨의 경우 베이징 소재 미 대사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미 정부도 최씨가 미국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판정, 바로 영주권 부여

보수단체들,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9.24)

-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활빈단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과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함.
 - 단체들은 “중국이 서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은 난민을 강제송환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탈북자를 강제 북송해 투옥·처형 당하게 하고 있다”며 “중국은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

탈북자 9명, 베트남 주재 덴마크대사관 진입(로이터 통신, 9.24)

- 탈북자 9명이 24일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며 한국활동가(정 베드로 목사)와 함께 베트남 수도 하노이 주재 덴마크대사관에 진입했다고 보도함.
 - 페테르 한센 주베트남 덴마크대사는 이날 “북한주민이 대사관에 진입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탈북자 수와 자세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

중국 국경서 체포된 탈북자 5명 구명운동(9.28)

- 동남아로 이동 중 중국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힌 북한 이탈주민들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됨.
 - 북한인권국제활동연대는 “지난 9월 18일 오전 중국 광시성 쑹시현에서 붙잡힌

탈북자 5명을 구명하기 위해 미국 인권단체를 통해 미 국무부와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

- 이들 탈북자들은 지난 9월 24일 덴마크대사관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 9명의 일행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 중 국경 부근 도시인 광시성 쑹시현에서 산을 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수감 중

탈북자 해외 정착 증가추세(9.30)

-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체류 탈북자 제3국행 지원현황’에 따르면 2009년 들어 7월까지 모두 23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함.
 -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수는 지난 2006년엔 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7년 22명에서 지난해엔 37명으로 증가
 -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의 수도 지난 2007년엔 1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7명으로 늘었고 2009년 상반기에는 37명으로 급증

미국 감사원, 탈북자 문제 전면조사 착수(10.1)

- 버락 오바마(Obama) 미 대통령이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데 이어,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섬.
 - 미 의회는 최근 존 케리(Kerry·민주) 상원 외교위원장과 샘 브라운백(Brownback·공화) 의원이 중심이 돼 회계감사원(GAO)에 미 행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조사 지시
 -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의회를 통과한 후에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정부의 행정 및 회계 문제를 조사하는 GAO에 이에 대한 조사 지시
 - GAO는 최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면담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동남 아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현황, 미국 입국과 관련한 현지 대사관의 협조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

북한주민 11명, 동해 해상 통해 탈북(10.1)

- 탈북자는 남자 5명, 여자 6명으로, 오후 6시30분에 3t 규모의 ‘전마선(傳馬船, 소형 고기잡이 배)’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짐.

- 군 육상레이더 기지에서 이들의 접근 사실을 포착, 해경이 곧바로 북한 선박에 접근해 탈북의사를 파악하고 강원도 주문진항 인근으로 안전하게 유도
- 일각에서는 최근 식량 부족 등 경제난으로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거주 주민들의 체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선박을 이용한 해상 탈북 러시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주장 제기
- 북한 체제의 특성상 '보트 피플'과 같은 해상탈출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 우세

미국 북한인권법 근거 미국정착 탈북자 현재 93명(VOA, 10.1)

-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지난 2006년 5월 처음 탈북자를 받아들인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9월 말 현재 93명으로 집계됨.
 - 미국 국무부 난민 담당 관계자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회계연도 기간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총 25명으로, 전년보다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 미국 입국 탈북자는 2005~2006 회계연도에 9명, 2006~2007 회계연도에 22명, 2007~2008 회계연도에 37명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 회계연도에는 25명으로 30% 이상 감소
 - 이로써 미국이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지난 2006년 5월 처음으로 탈북자가 난민 자격을 얻어 입국한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9월 말 현재 93명

미국, 2010년도 탈북난민 100명 수용(RFA, 10.3)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010년 회계연도에 미국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를 최대 100명까지 난민으로 수용할 계획(대통령 결정(Presidential Determination) 2009-32호)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주요 난민 발생국을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유럽/중아시아, 아메리카, 근동/남 아시아 등 5개 지역별로 1년 동안 수용할 난민의 수를 배정
 -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은 의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 보고서에서 “공산 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베트남인의 집단망명을 허용했던 혜택을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제외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수용 난민 수를 줄였다”고 설명
 - 국무부는 동아시아에 개별 망명 2천 700명, 집단망명 1만 3천 600명, 가족재결합 100명으로 세분해 난민 수용 계획을 세워 동아시아에서 버마와 북한만 적용되는

가족재결합을 통할 경우 100명으로 배정된 수용 예정 난민 중 상당수가 탈북자로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정부, 탈북자단체 사업 재정지원(10.5)

- 정부가 처음으로 탈북자 단체의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됨.
 - 통일부는 5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NK인포메이션센터,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탈북여성연대, 송의 동지회, 탈북자동지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등 7개 단체의 탈북자 정착 지원 사업에 1억 원 지원
 - 이들 단체의 사업은 ▲탈북청소년 취업알선 ▲성공한 입국선배 배우기 ▲봉사 활동을 통한 남북간 문화 통합 및 인식개선 등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탈북자 단체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

중국 선양서 탈북자 대거 체포, 북한 이송(10.5)

- 최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수십 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짐.
 - 국경절을 앞두고 지난 8월부터 대대적인 치안 단속에 나선 중국 공안당국이 선양의 한인타운인 시타(西塔) 일대 유흥업소와 민박집 등에서 은신해 있던 탈북자 수십 명 검거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뤄진 대대적인 탈북자 검거가 북-중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나 “탈북자뿐 아니라 마약 사범 등 강력범들이 대거 체포됐다”며 “국경절을 앞둔 일상적인 치안 단속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적발된 것일 뿐 다른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부인

브로커들 탈북자학교 무단침입 빈번(10.6)

- 탈북 브로커들이 탈북을 도와준 대가를 받아낼 목적으로 탈북청소년 교육기관인 한겨레 중·고등학교(경기 안성 소재)에 자주 침입하는 것으로 파악돼 시설 보안 강화 요구 제기
 - 광종문 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여태 9차례 (브로커들의) 학교 침입이 있었다”며 “브로커들이 학생들에게 오는 사유에는 브로커 비용을 받지 못해 오는 것이 있다”고 소개

탈북자 합동심문기간 연장 추진(10.8)

- 정부가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정착지원을 하기까지 국가정보원 주도로 진행되는 합동심문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에 대해 보호(정착지원)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기간이 최장 90일로 규정
 - 정부는 작년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원정화씨 사건의 재발을 막고 탈북자로 가장한 재중동포의 편법적인 국적취득 시도를 차단하려면 심사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 개정 검토
 - 그러나 조사 기간이 대폭 늘어나는데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어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 존재

북한, 해상 탈북예방 검열 강화(10.11)

- 최근 북한당국이 동해해상 탈북주민 11명을 계기로 수산부문의 전마선들과 중형 어선에 대한 등록과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탈북 지식인 모임인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국방위원회 지시로 고깃배 등록과 운영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수산부문 일꾼들의 협의회가 특수기관(군부와 당 기관)과 수산부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단위의 수산부문 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경북도 해상 감독처 회의실에서 열렸다”고 설명
 -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적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어선 정박장과 특수기관의 무질서한 입출항 질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으며, 특히 군부나 당 연락소등 특수기관들이 어선 정박장을 따로 설정해 해안경비초소의 검열 없이 자유로이 출항하는 현상을 지적”
 - 국방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청진의 동향과 서항 등 해안검열초소의 검열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항하는 곳 10여 군데

중국-베트남, 국경 체포 탈북자 5명 북한 송환 가능성(RFA, 10.1)

- 9월 중국과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5명이 결국 북한으로 송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헬핑핸즈코리아(Helping Hands Korea)'의 팀 피터즈 대표는 “베트남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체포된 탈북자 5명이 중국 동북부의

투먼(도문)으로 옮겨져 수감된 상황까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강제 복송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

북한, 탈북자 차단 위한 비상대책 마련(10.13)

-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부에서 탈북자 증가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NK지식인연대는 13일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0월 5일 평양 국가보위부에서 도, 시의 보위부장과 국경 경비총국 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도 보위일꾼 협의회가 열렸다”고 전언
 -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탈북자 연인원이 제일 많은 함경북도가 올해에도 여전히 탈북건수가 줄지 않아 지적 받았다”고 말하고, “탈북은 이유를 불문하고 반국가적인 행위로 국가보위사업에 엄중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탈북자의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한 사상동향 조사를 강화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
 - 북한 내부 소식통은 “최근 국경지대의 여행자단속도 강화돼 검문초소 컴퓨터에 여행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신원은 물론, 여행목적과 장소, 민박지와 만날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돼 있다”고 전하며, “불순한 목적으로 타지의 주민을 집에 받아들이고 탈북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공범으로 취급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경고를 했다”고 부연

베트남, 탈북자 덴마크 대사관 진입지원 목사 석방(10.17)

- 9월 24일 탈북자 9명을 베트남 하노이 주재 덴마크 대사관에 진입시킨 뒤, 베트남에 검거돼 수감 중이던 탈북지원가인 정 베드로 목사가 석방됨.
-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며 베트남 하노이의 덴마크 대사관에 머물러온 북한주민 9명은 10월 20일 대한민국에 입국함.

탈북자수 향후 20년간 연 5.3% 증가 예상(10.21)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8년 입국자의 수는 2,809명이었지만, 2009년 2,835명, 2010년 3,24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북한에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탈북자 수는 완만하게 증가, 10년 후인 2019년 5,804명, 20년 후인 2029년 8,654명의 탈북자가 남한에 정착할 것이며, 이에 따라 탈북자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도 상승, 향후 10년간 2조 2천 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탈북자 지원비용 가운데 생계급여 소요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4.5%에서 2029년 53.8%로 상승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

외국인·새터민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 추진(10.21)

-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주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을 거주지 관할 지방공무원으로 뽑는 등 채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시행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힘.
 - 북한이탈주민 중 공무원으로 채용된 인원은 경기도 2명, 6개 시 각 1명 등 8명에 불과

경기도 ‘탈북주민 지역적응센터’ 2개→6개로 확대 계획(10.27)

-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현재 2개인 도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일명 하나 센터)를 내년에 6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역적응센터가 추가 설치되는 곳은 ▲동부권(용인 등 7개 시·군 담당) ▲제1남부권(수원 등 3개 시·군 담당) ▲제2남부권(안성 등 3개 시·군 담당) ▲서북부권(고양 등 3개 시·군 담당)
 - 도는 이와 함께 1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할 ‘탈북자 직원’ 채용 유도 계획

‘생활 보조금 사기’ 탈북자 132명 적발(10.28)

- 탈북자 132명에게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신경정신과 의사(사기와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를 적발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
 - 김모씨(26, 2002년 5월 입국)는 1인당 200만~400만원을 받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입국을 알선하는 브로커로서,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정부에서 매월 45만~9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준다는 점을 악용
 - 경찰은 허위 진단서로 생활보조금을 받아 챙긴 브로커 김씨 등 탈북자 13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태국 체포’ 탈북자 30~40명, 수용소 수감(RFA, 10.29)

- 태국 경찰에 체포된 북한이탈주민 30~40명이 10월 21일 불법입국 혐의로 북부 접경지역의 메이사이 이민수용소에 수용돼 있다고 전함.
 - 이들은 지난 21일 중국의 단속이 심해지자 집단으로 탈출해 라오스를 거쳐 3척의 소형선박에 나눠 타고 라오스와 태국 접경을 흐르는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입국하려다 태국경찰에 체포
 - “메콩강의 수위가 낮아지자 라오스를 거쳐 메콩강을 통해 태국으로 건너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더 많아진 것”으로, 치앙라이 현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총 190명이 구속됐으며, 10월 한 달에만 총 6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체포

태국, 탈북자 18명 체포(RFA, 10.30)

- 태국 북부 치앙라이 지역에서 10월 29일 탈북자 18명이 추가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 태국과 라오스 접경지역의 태국 치앙센 경찰은 “탈북자 18명이 불법 입국혐의로 메콩강 보안군에 의해 체포돼 메이사이 이민수용소로 송치할 것”이라고 발표

미 NED, 탈북자 단체에 135만 달러 지급(RFA, 11.5)

- 미국의 국립 민주주의기금(NED)이 지난 회계연도에 총 135만 달러를 한국의 북한 이탈주민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짐.
 - 국립 민주주의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탈북자 단체나 관련 기관은 모두 13개로, 매년 지원을 받는 ‘자유북한방송’과 ‘열린북한방송’ 등 3곳은 국무부와 유럽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난 회계연도의 지원금액이 다소 감소
 -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북한개혁방송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NK커뮤니케이션에 17만 5천 달러, 자유북한방송에 15만 달러, 열린북한방송에 15만 달러,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NK’에 13만 달러 등 8개의 언론매체에 대부분을 지원했으며 ‘북한인권 시민연합’, ‘북한정보센터’ 등 일반 비정부 단체도 지원
 -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받은 4개 단체는 ‘북한지식인연대(NKIS)’와 ‘킴진강’, ‘백두한라회’, ‘북한인권탈북청년연대’ 등으로 총 20여만 달러 수령
 - 이처럼 국립민주주의기금은 지출한 전체 135만여 달러 중 90여만 달러, 약 70% 가까운 예산을 북한과 관련한 라디오 방송,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지원

태국 국경지역 탈북자, 구호물품 부족으로 어려움(RFA, 11.4)

- 태국으로 진입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늘고 있으나, 구호물품 보급은 물론 통역자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짐.
 - 일본의 민간단체 '북조선난민구원기금(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이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의 협조로 지난달 20일 치앙마이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인 치앙센 경찰서를 찾아가 탈북자들을 위한 의약품, 담요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카토 히로시 대표가 발언
 - 치앙센 경찰서는 22일 "전날 체포된 8명의 탈북자까지 포함해 40명의 탈북자가 구금돼 있고 3명의 남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20~30대의 여성"이라고 발표

북 급변사태 때 탈북자 최대 200만 발생 예상(11.7)

- 북한에서 정권 교체나 쿠데타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탈북자가 최대 200만 명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합참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급변사태 시 북한이 탈북을 적극 억제할 경우 탈출 인원이 10만 명,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180만~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간 '개념계획 5029'에 대해 "개념계획 단계를 넘어서 발전돼 있다"고 발언

탈북자 김성민, 대만 민주인권상 수상(11.7)

-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북한 민주화를 위한 방송 활동을 인정받아 '대만민주기금회'의 '2009 아시아 민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
 - '대만민주기금회'는 지난 2003년 6월 대만 외교부 주도하에 여야의 초당적 지지로 설립됐으며, 이 상은 매년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여

한국-중국 탈북브로커, 비용 갈등에 북송 방치(11.10)

- 2008년 탈북한 국군포로 손녀와 이 손녀의 이종사촌이 한국 내 국군포로 관련 단체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건은 각종 브로커가 난무하는 '탈북 중개 시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줌.

- 사건은 국군포로 가족의 탈북에 개입한 중국 측 브로커와 한국 측 국군포로 관련 단체, 가족이 송환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결과
- 6·25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중국 내 브로커가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며 한국 내 국군포로 가족을 협박했기 때문에 중개인을 잡아넣은 뒤 다시 탈북자를 빼낼 생각으로 신고했다고 해명

캐나다, 3분기에 탈북자 15명에 난민 지위 부여(VOA, 11.10)

-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2009년 3분기에 탈북자 15명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함.
 - 캐나다에서는 2009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탈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올 1월부터 3월까지 16명, 4월부터 6월까지 21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 2009년 총 52명
 - 미국의 소리 방송은 “캐나다에서는 현재 68명의 탈북자들이 당국으로부터 난민 지위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서울경찰, 탈북자 정착 지원대책 마련(11.10)

- 서울지방경찰청은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돕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힘.
 - 경찰은 그간 탈북자의 신변 보호 업무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극빈자와 중증환자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경찰관과 보안협력위원들이 탈북 가정과 결연을 하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도록 할 예정
 - 또 ‘1서 1병원’ 지정제를 추진해 탈북자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를 시행하고 무료 법률상담과 취업지원 행사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탈북중개인 피해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련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

통일부-지방의료원 연계, 탈북자지원협약(11.11)

- 통일부와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진료지원협약서를 체결함.
 - 이 협약에 따라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사용한 각종 검사 비용과 입원비 등의 감면 혜택 수혜

러시아, 벌목공출신 탈북자 미 망명 첫 허용(11.10)

- 러시아는 북한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탈북자의 난민 인정과 미국 망명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2008년 10월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유엔난민최고대표 사무소(UHCR)의 보호를 받아오던 벌목공의 미국 망명을 처음으로 허용함.

미국 의회 위원회, ‘탈북자 전담반’ 설치 건의(RFA, 11.13)

-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중국의 인권과 법치 상황을 정리한 2009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위한 특별전담반이 필요하다고 미국 정부에 건의함.
 -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HCR)의 탈북자 접견을 보장하는 대신 미국 정부가 중국에 제공할 혜택을 개발하는 미국 정부 산하의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라”고 건의
 -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돕는 중국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2009년 8월 북한을 탈출해 몽골로 향하던 탈북자 61명에 음식과 은신처, 교통을 제공한 중국인 두 명에 중국 법원이 각각 7년과 10년 형을 선고한 사례 소개
 -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이 중국에 무역 최혜국 지위를 부여한 ‘항구적정상교역관계’를 체결하면서 설립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 만큼 인권과 법치의 수준도 국제사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례 보고서 발표

탈북자 돕던 조선족 등 200여명 북(北) 납치(11.16)

-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탈북 주민을 도운 조선족 등 중국인들을 약 200여명 납치 하였으나,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납치된 것을 확인하고서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탈북자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중국 창바이현(長白縣) 정부 및 가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창바이(長白)현 팔도구 보건소 운전기사였던 조선족 이성광(44)씨는 1998년 고위직 출신 탈북자 등 북한주민의 탈북을 도왔다는 이유로 북으로 납치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카이산툰에 거주하면서 10년째 탈북 브로커로 일하던 조선족 이기천(42)씨도 2008년 4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납치된 것으로 전언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개원(11.19)

-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본격 활동을 시작함.
 - ▲실태조사 및 중장기정책연구 ▲학교 교육 지원 ▲탈북학생과 성인 역량개발 ▲각급학교 교사연수 ▲교육상담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무지개청소년센터’, 통일부 산하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담당하는 허브센터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

‘하나센터’ 2010년 30곳 설치 예정(11.27)

- 17,000명을 넘어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42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30곳을 설치해 이들의 정착 지원에 나선다.
 - 하나센터는 탈북주민 전입예상 인원과 서비스 권역, 접근성 등이 고려돼 서울 4곳, 경기 6곳, 인천·경남·충남·경북·광주·강원 각각 2곳, 부산·대구·충북·대전·전남·전북·울산·제주 각각 1곳에 설치
 - 하나센터에서는 탈북주민들을 상대로 생활교육(경제·법률 등)과 기본건강증진, 직업준비, 진학지도, 개인·가족 역량강화, 인생설계, 선배 탈북자와 만남 등의 프로그램으로 3주간의 집중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1년 정도 개인별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이 되도록 하고, 경제적 자립기반도 갖추게 도울 예정

통일부, 경기도와 탈북자 지원 협약(11.30)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직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사단법인 북방권교류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힌다.
 - 북방권교류협의회는 영농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 운영하면서 화훼재배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을 채용
 - 통일부는 영농 분야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탈주민들을 북방권교류협의회에 추천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되며 경기도도 판로확보를 지원할 예정

탈북자 '통일인연대' 창당(12.9)

- 탈북자가 주도하는 가칭 '통일인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함.
 - 창당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탈북자 출신의 정수반(가명·41)씨는 “탈북자 2만 명 시대를 맞아 남북을 아우르며 통일을 준비하는 정당을 꿈꾸고 있다”면서 “창당 준비위원회 등록을 계기로 국민 가운데 명망 있는 분들 가운데 고위당직자를 공모할 것”이라고 발언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강서를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낙천한 그는 “지금까지 창당 발기인으로 162명이 참여했고 그중 13명이 탈북자”라면서 “내년 5월 창당대회를 거쳐 6월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발언

2. 납북자

국민권익위원회, 납북 피해자 실태조사(7.16)

- 국민권익위원회는 납북 피해자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현장 민원상담 활동을 벌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납북 피해자 실태조사는 국가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 진행중인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속초와 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도 계획을 잡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연안호와 선원 4명 석방(8.29)

- 북한은 남북 군사당국 간 군 통신선을 통해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수역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연안호 선채와 선원들을 29일 오후 5시 동해상의 약속 지점에서 남한 측에 인도하겠다고 통보함.
 - 연안호에는 박광선 선장과 김영길 기관장, 선원 김복만·이태열씨가 승선

국민권익위원회, 납북자 귀환비용 국가부담 추진 권고(9.23)

- 국민권익위원회가 납북자 귀환 비용 국가 부담 및 납북자 가족 생활안정지원 등 11개 분야 정책개선안을 마련해 통일부와 농림수산물부,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권고함.
 - 개선안에는 3년 미만의 납북피해자도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법 시행 후 3년 이내(2010년 10월27일)로 제한된 피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
 - 이 외에도 위령사업 등으로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납북자문제에 대한 홍보와 납북자 정보 제공, 상시 상담 등을 통해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도 포함

동진호·국군포로 납북이산가족 상봉 참여(9.28)

- 납북자 2명(노성호(48), 진영호(50), 동진27호(1987년 납북))과 국군포로 1명(이쾌석(79))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린 납북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 납북 가족을 상봉함.

납북 안승운 목사, 설교 동영상 입수(9.29)

- 납북자가족모임은 1995년 7월 중국 옌지(延吉)에서 탈북자들을 돕다 납북된 안승운 목사가 북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함.
 - 동영상은 1997년 평양 봉수교회 설교 장면으로, 안 목사는 자리로 돌아가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예배 직후 신도들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름.
 - 납북자가족모임은 입수 동영상이 북측 기관원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면, 안 목사는 북한 내에서 3년 동안 목회활동을 한 것으로 알지만 그 이후 소식은 모른다고 발언
 - 이산가족상봉명단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생사 확인을 북한에 요청했지만 확인 불가 통보

북한, 최근 연락된 납북어부를 '연락두절'로 통보(9.29)

- 북한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확인에서 최근까지 납북 가족과 간접적으로나마 연락을 취해 온 납북어부 허정수씨에 대해 '연락두절'이라고 회신해온 것으로 알려짐.

-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허정수(56)씨는 지난 달까지 “보낸 사람”을 통해 가족들과 편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짐.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발간(9.14)

-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006년 제1차 자료집 발간 후 만 3년 만에 1,200쪽에 달하는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제2권을 발간하고 정부와 사회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 이번 사료집에는 특히 지난 1963년 국방부가 발간한 민간인 납북자 명단 중 일부인 11,700명의 명단 탑재
 - 협의회는 가나다순 성씨 중 이씨 초반부까지만 기록돼 있는 국방부 명단 자료를 확보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전쟁 중 납북자 명단과 대조하고 있으며, 국방부 명단은 이른바 ‘의용군’을 제외하고 순수한 납북자 위주로 돼 있어 전쟁 당시부터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가던 정부에 의해 충분히 검증된 마지막 명부로 평가
 - 자료집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남북한관계사료집 제5권에서 발췌한 북·미간 휴전회담 회의록(1951.12.11~1952.5)도 수록돼 있는데 이 회의록에는 “미국이 국내 여론때문에 한국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남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언급

납북자 귀환, 대가 제공 검토(10.26)

-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법으로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가 이미 2008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짐.
 -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용역보고서는 서독이 통일 전 동독 정치범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환, 상품 등을 제공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우리 현실에 응용한 ‘K-프라이카우프’ 방안 제시
 - 보고서는 ‘K-프라이카우프’의 추진원칙과 방안에 언급, “국군포로·납북자가 없다는 것이 북한당국의 공식 입장인 만큼 북의 입장과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과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

국회,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 통과(12.4)

- 국회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킴.

-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결의안이 재석 174명, 찬성 169명 기권 5명으로 통과
- 결의안은 북한당국에 국군포로 및 납북자가 조속한 시일 내 송환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 대화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송환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 포함

3. 국군포로

국방부, 베트남 참전 안학수 하사 국군포로 추정자 관리(7.21)

- 국방부는 34년간 월북자로 분류하였던 베트남 참전 국군포로 안학수 하사를 국군포로 추정자로 관리하기로 결정함.
 - 안학수 가족은 비밀문서로 분류되었던 기무사문건을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하여 정부가 안학수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
 - 1976년 남파됐다 자수한 무장간첩 김용규 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안 하사가 북한을 탈출, 북-중 국경선에서 체포돼 평양으로 압송된 뒤 ‘간첩죄’로 총살형을 당했다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언
 - 국방부는 안학수가족이 신청한 납북피해위로금 심의결과를 감안하여 5월 병적 기록을 ‘탈영·월북자’에서 ‘탈영(외출미귀 및 납북)’으로 수정하고 6월 제90차 국방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안 하사를 국군포로 추정자로 관리하기로 의결

납북자가족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진정 접수(8.25)

- 납북자가족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관련 진정을 접수함.
 - 납북자가족모임은 “북한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계속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를 감추고 있어 인권을 침해한다.”며 “이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발표토록 북한에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 제기
 - 납북이 6·15선언 3항에서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해결만 언급하고 납북자·국군포로 사안을 빼 것은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며 형평성도 없었다고 주장

적십자회담, 국군포로·납북자 상봉문제 논의(8.27)

-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상봉 방식을 합의문에 표기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함.
 - 남측은 추석 상봉 때는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을 기존 이산가족 상봉에 포함시키는 대신 이후 상봉 때는 새로운 형식의 상봉으로 진행하자고 제안
 - 북측은 이에 대해 일단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 논의하자는 입장

국방부, '국군포로 소련이송' 증거 미발견 확인(8.27)

-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들이 소련으로 끌려갔다는 미국 국방부 문서의 사실 여부를 규명할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힘.
 - 국방부는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에 '국군포로 소련 이송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이 일부 나오긴 했지만 결정적인 단서 미확보
 - 군사편찬연구소는 사실규명의 핵심인 구(舊)소련 강제수용소가 위치하고 있었던 시베리아 마가단 지역을 방문조사한데 이어 6·25전쟁 중 미군포로 및 실종자에 대한 미·러 합동연구조사 보고서를 수집해 분석
 - 또한 구소련 지역의 6·25전쟁 참전자 및 수용소 목격자 등 국내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접도 동시에 진행
 - 이 과정에서 1958년 식량배급 정책을 관장하는 함경북도 양정국 공급과장이었던 탈북자 박모씨로부터 "정전협정 무렵 1개연대 규모(3천여명)의 국군포로를 청진-두만강역-हत산역을 통해 소련으로 이송했다는 문서를 확인했다"는 증언을 확보

북한 생존 국군포로 560명 추정(8.28)

- 국방부는 탈북자의 증언과 각종 첩보 등을 통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수는 2007년 말 기준 560명으로 추정하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문제를 국가적 책무이행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 6·25 국군포로가족회와 국군포로송환위원회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이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343명에 불과

국회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촉구(9.23)

-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시키자는 주장이 여야 3당에서

공동으로 제기됨.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선영(자유선진당)·박상천(민주당)·윤상현(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통일 전 독일에서 서독이 동독에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범을 소환했던 프라이카우프 (Freikauf) 제도를 도입하자는데 의견 일치

월남전 실종 박성렬 국군포로 인정(9.30)

- 국방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실종된 뒤 북한 체류가 확인돼 월북자로 관리되던 박성렬 당시 육군 병장을 국군포로로 인정함.
 - 9월 24일 열린 국방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통해 베트남전 실종자(안학수 하사, 김인식 대위, 정준택 하사 등 총 4명)인 박 병장을 국군포로로 관리하기로 결정

귀환 국군포로 79명 집계(10.3)

- 국방부는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79명이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것으로 집계함.
 -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현재 까지 국군포로 79명과 가족 182명 귀환
 - 국방부는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의 송환에 응해주도록 남북 회담 때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

중국 체류 국군포로가족 2명 강제복송(10.21)

- 국군포로 가족이 최근 북한을 탈출해 중국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의 보호 아래 있다 체포돼 복송된 것으로 알려짐.
 -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국군포로 가족 2명이 탈북하여 9월 중순 선양총영사관 잠입에 성공하였으며, 총영사관이 수용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민박집에 머물다가 9월 하순 중국 공안에 발각돼 강제 복송
 - 2006년 10월 남측 가족의 도움으로 국군포로 가족 9명이 북한을 탈출해 선양 총영사관 잠입에 성공했으나 민박체류 중 체포되어 강제복송된 전례 존재

81세 국군포로 북송(北送) 위기(10.22)

- 2009년 8월 중순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81)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北送)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당국과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에 따르면 국군포로는 8월 16일 탈북에 성공했지만 8월 24일 중국 공안에 붙잡힌 뒤 26일부터 옌지(延吉) 인민병원에 억류
 - 중국 정부는 건국 60주년 기념일(10·1)을 앞둔 지난 8월부터 전국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해 탈북자 수십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전언

북송 국군포로가족 2명, 회령에서 조사(10.23)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3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국군포로 가족 2명이 북송돼 현재 함경북도 회령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함.

4. 이산가족

미국거주 한인 이산가족상봉 촉구 서명운동(7.1)

- 미국 내 한인들의 연합단체인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청원서 서명운동을 추진함.
 - 자유아시아방송에서 “한인 이산가족은 앞서 부시 행정부 시절 통과된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법’에 기대를 걸었으나, 최근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희망을 잃고 있다”면서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
 -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청원서 서명 운동을 시작해 현재 약 8,000명이 이 청원서에 서명했으며” 3만 명 서명 목표

미국 상원, 미국 재정착 탈북자 지원 강화 촉구(7.13)

- 미 상원 세출위원회는 이주·난민 지원 전체 예산으로 16억 8천만 달러를 승인

하면서, “북한인권 재승인법이 규정하는 대로 북한 난민들도 지원”을 강화할 것을 국무부에 요구함.

- 북한인권 재승인법은 “2010 국무·대외사업 예산안 발효 60일 내에 북한 난민들의 미국 재정착 사례를 늘리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개선할지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국무장관이 제출할 것을 의무화”

민족21, 북한 추석 이산가족상봉 제안 (7.21)

- 북한 내부 사정을 전해온 진보성향 월간지 ‘민족21’ 주간은 “북한을 다녀온 해외 인사의 전언”이라며 북한이 조만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함.
 - 정 주간은 ‘민족21’ 8월호에서 해외인사가 “북측의 고위관계자로부터 10월 3일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특별상봉을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사전접촉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북의 적십자사를 통해 남북 적십자사간 실무접촉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

한적, 26~28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8.20)

- 대한적십자사는 20일 북한의 조선적십자사가 추석(10.3)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고 밝힘.
 - 2008년 11월 12일부터 단절된 상태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 전화 대신 군 통신선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한적십자사 장재언 위원장에게 제17차 이산가족 상봉 개최를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갖자는 통지문 전달
 - 대한적십자사는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원활히 준비하기 위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
 - 지난 10~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이뤄진 ‘추석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 따라 정부와의 사전 조율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협의(8.26~28)

-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26~28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어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면회소에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함.

- 합의서는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
- 합의서 2항은 남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기한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북측이 남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문제도 포함,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현안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며 관계발전을 도모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
- 합의서에 따르면, 9월 26~28일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 가서 북측 가족 약 200명과 만나고, 이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서 약 450명 가량의 남측 가족과 상봉 예정
- 한편 지난 2000년부터 진행돼 온 남북적십자회담 관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제10차 회담이 되지만 합의서엔 남측의 주장에 따라 제10차라는 차수를 명기하지 않은 채 ‘남북적십자회담’이라고만 표기됨으로써 이명박 정부와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

한적, 이산가족 생사확인 북한 의뢰(9.1)

- 대한적십자사는 31일 남북 이산가족의 추석 상봉을 위한 남측 방문단의 예비 후보자가 200명으로 압축됨에 따라 이들이 상봉을 희망하는 북측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9월 1일 북측에 의뢰함.
 - 한적은 등록된 상봉 신청자 8만여 명에 대한 컴퓨터 추적을 통해 28일 방문단의 3배수인 300명을 선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상봉의사를 확인하고 건강 검진을 거쳐 200명으로 압축
 - 한적은 9월 1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과 생사확인 의뢰서를 상호 교환하며, 관례대로 이 200명 가운데 10% 정도 국군포로와 남북자들을 포함
 - 남측의 생사확인 의뢰자 중 80대가 9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70대 66명, 90대는 25명, 70세이하 16명 순이고, 출신지로는 황해도(44명), 평안남도(28명), 함경남도(26명) 등의 순
 - 북측의 생사확인 의뢰자 중 최고령자는 전라북도 완주군 출신의 고덕희(여)씨를 비롯해 85세 동갑이 7명임. 남측의 부모와 동생을 찾는 고씨는 1950년 가족과 헤어질 당시 교사
 - 북측 의뢰자 중에선 70대가 15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는 80대이며, 출신지역별로는 경기(32명), 강원(29), 서울(24) 등의 순
 - 북측 의뢰자 200명 중 38명은 이미 과거에 남측 가족들의 생존이 확인됐으나 최종 상봉자 100명에 포함되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 상봉하지 못한 것으로 전언

- 남측은 남성 125명, 여성 75명, 북측은 남성 144명, 여성 56명이어서 남북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다수

정부, 이산상봉실비 면제(9.7)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실무위원회에서 이산가족 상봉 때 방북하는 상봉 대상자에게 경비로 1인당 10만원씩 징수하던 것을 2009년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부터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
 - 2000년 제2차 이산가족상봉 행사 때부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원을 받아왔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순수 인도주의적인 사안이며 국가의 책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앞으로는 면제하는 방안 추진

아바이마을, 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9.9)

- 강원 속초시의회는 청호동 '아바이마을' 실향 1세대의 이산가족 상봉 꿈을 실현해 달라는 건의문을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함.
 - 현재 1940년 이전에 출생한 실향민 279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바이마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향민촌임에도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고조
 - 속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16차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아바이마을에선 단 한 명도 상봉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실향민 1세대가 더 이상 상실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구

통일부, 이산가족 상봉 예정 추진(9.10)

- 통일부는 임진강 수해로 인한 남측 인명피해 사고와 관계없이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가장 인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최근 이런 사태와 무관하게 합의된 대로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

미국 한인 단체, 유엔 북한 대표부와 이산가족 논의(RFA, 9.12)

- 미국한인들로 구성된 '전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신선호 대사)에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힘.

- 워싱턴 지역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는 이날 미국 사회에 이산가족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유엔에 파견된 북한대표를 직접 만나 북한의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

남북, 이산상봉 생사확인결과 교환(9.15)

- 남북적십자사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9.26~10.1)에 참가할 예비 상봉 후보자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함.
 - 남측은 북측이 생사확인을 의뢰한 상봉 예비 후보자 200명 중 159명의 남측에 살고 있는 가족 총 1천387명의 생사를 확인해 북측에 전달
 - 교환된 생사확인 회보서를 토대로 직계가족과 고령자를 우선하는 인선 기준에 따라서 우리 측 최종 상봉대상자 100명을 선정, 17일 북측과 상봉대상자 최종 명단을 교환할 예정

정부, 추석 이산상봉에 13억여 원 지원(9.16)

- 정부는 제2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13억 1천 593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함.
 -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드는 경비는 행사준비비, 국내집결지 숙식비, 이동 경비, 체재비, 상봉행사비, 가족공동식사비 등임.
 -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때 방북하는 상봉 대상자에게 경비로 1인당 10만원씩 받던 것을 면제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던 상봉 준비비는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의결

정부, 이산상봉행사 최종 점검회의(9.23)

- 금강산에서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제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회의가 23일 개최됨.
 -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대한적십자사와 경찰청 등 유관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기간에 서울과 금강산에 각각 마련되는 상황실의 운영체제와 유관부서간 역할분담 등을 논의
 - 남측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상봉행사에 참석할 상봉단 98명(2명은

- 건강상 이유로 상봉 포기)과 이들의 동반가족 등 127명에 대해 방북 승인
- 정부는 127명과 취재기자단, 정부관계자 등 북한지역에 들어가는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하는 등 신종플루 예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9.26~10.1)

- 추석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6일 오후 3시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금강산에서 환영만찬(1일차), 개별상봉, 공동중식, 야외상봉(2일차), 작별상봉(3일차) 형식으로 개최됨.
 - 약 2년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1차 상봉(9.26~28)에서 남측 방문단 97명과 동행가족 29명이 북에 있는 가족 240명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단체로 상봉

남북적십자 개성 실무접촉(10.16)

- 남북적십자사는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회사무소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비롯한 인도주의 현안을 협의함.
 - 이번 접촉은 대한적십자사가 10월 12일 제의하고 13일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동의함에 따라 성사
 - 남측은 11월 중 서울과 평양에서 '교환 상봉' 행사를 개최하고, 2010년 설 계기에 상봉행사를 개최하는 방안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활용한 상시상봉 시스템 구축 등을 제의
 - 아울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 이산가족 상봉 대상에 일부 포함시키는 기존 방식을 넘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

5. 분석 및 평가

북한당국의 탈북차단 검열 및 단속 강화

- 탈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상탈북 등 탈북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북한 당국은 탈북차단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짐.
 - 국가보위부차원에서 탈북자 가족 및 친척에 대한 사상동향 파악, 국경지역에

대한 여행증 및 숙박 검열 강화

- 동해안 해상탈북 발생을 계기로 수산부문의 전마선들과 중형 어선에 대한 등록과 검열 강화

재외 탈북자 동남아국가 유입 지속

- 한국 등 제3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탈북자들의 동남아 밀입국 시도가 지속되면서, 국경지역에서의 집단 체포 및 외교공관 진입 등이 이루어짐.
 - 태국 등 관련국은 밀입국에 대한 재판 및 처벌 이후 추방하는 형식
 - 미국 망명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되는 현실에서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수용규모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촉구 제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지속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발효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됨.
 - 지역단위 정착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하나센터가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 전문상담사 채용 및 16개 시·도 지역 하나센터 확대계획이 구체화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관심도와 역량은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

탈북자 단체 영향력 확대

- 탈북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들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활동영역이 대북방송 등 북한인권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정착지원사업 등으로 확대됨.
 - 관련 기금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여 활동영역 확대
 - 탈북자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우위를 강조하고, 정착지원사업 등에서도 독자적인 활동역량 부각
 - 탈북자들이 주도하는 정당 '통일인연대' 발기 등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 가시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동사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도 남북대화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함.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차 사료집을 발간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
- 납북자가족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진정서 제출
-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납북자 2명과 국군포로 1명 참여
-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일 프라이카프 방식의 대북 거래 필요성이 지속적 제기

이산가족상봉 재개

- 남북당국 간 관계 경색으로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되어 이산가족 면회소가 활용됨.
 - 남북적십자사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 납북자 및 국군포로 등 인도적 사안을 위한 협의의 필요성 확인
 - 미국 이산가족들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참여 요청

〈부 록〉

제64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국문요지

(서두)

-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의무, 국제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을 재확인
-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
- 09.1월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심의시 가진 건설적 대화를 인권분야의 국제협력 노력에 참여한 표시로 주목하며, 향후 북한내 아동상황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
- 최근 09.1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포함, 북한이 당사국인 4개 협약감시기구의 최종견해에 주목
- 북한 보건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아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과의 협력을 평가
- 유엔개발계획(UNDP)이 북한내 활동 재개 결정을 주목하며,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할 것을 독려
- 관련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상기하고, 결의안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유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주목하며, 북한의 특별보고관 방북 불허와 비협조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유엔총회 결의 63/190에 따라 제출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포괄적인 보고서를 주목
-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
- 모든 한민족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관련, 최근 상봉 재개를 환영

(본 문)

1. 아래 사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a) 북한내 아래사항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에 관한 보고가 지속되고 있는 점

1) 고문, 비인간적 구금 및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존재 및 광범위한 강제노동;

2)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자 및 동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 부과된 제한 및 해외에서 송환된 자들의 처벌;

3)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 해외에서 송환된 북한 주민에게 가해지는 제재, 즉,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

⇒ 이와 관련,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을 인도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며,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의 접근 보장 촉구

⇒ 또한, 탈북난민과 관련하여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촉(추가)

4)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평등한 정보 접근, 선거권 행사 등을 통한 공적인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5) 북한주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 문제 및 여타 결핍에 이르게 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6)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7)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추가);

8) 장애인 권리 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

9) 노동자 권리 침해;

(b) 북한정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점;

2. 강제실종 형태의 납치문제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 강조

3. 북한의 불안한 인도적 상황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정부에 예방 및 구제조치 촉구
4. 특별보고관의 그간 활동 및 지속적인 임무수행 노력 평가
5. 북한정부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과 아래 사항을 강하게 촉구
 - (a) 총회,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조치, 유엔특별절차 및 협약 기구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즉각 중단
 - (b)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불처벌 문제를 다루며, 인권침해자들을 독립적인 재판관 앞에서 처벌
 - (c) 난민문제의 근본원인을 다루고, 인신매매 등을 통해 난민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고, 그 피해자들을 범죄인 취급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추방되었거나 송환되는 탈북자들이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귀환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장
 - (d) 북한내 완전하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허용 등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메커니즘에 협력 제공
 - (e)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목표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실과 인권분야 기술협력 활동 및 인권이사회의 UPR에 참여
 - (f) 노동자 권리의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
 - (g) 유엔 인도적 기구와 협력을 계속하고 강화
 - (h)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 인도적 기구들이 인도적 원칙에 따른 필요를 고려하여 북한내 모든 지역에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식량 접근권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정책을 이행
6. 65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 /끝/

(출처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United Nations

A/C.3/64/L.35



General Assembly

Distr.: Limited
29 October 2009

Original: English

Sixty-fourth session
Third Committee

Agenda item 69 (c)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Albania, Andorra, Australia, Austria,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Israel, Japan,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Monaco, Montenegr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alau,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rkey,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draft resolutio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at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have an obligation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o fulfil the obligations that they have undertaken under the vari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Mindful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¹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¹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²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³

Noting the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the consider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combin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a sign of engagement in international cooperative

¹ See resolution 2200 A (XXI), annex.

²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577, No. 27531.

³ *Ibid.*, vol. 1249, No. 20378.

09-58726 (E) 031109



Please recycle

A/C.3/64/L.35

effor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hoping that the enhanced dialogue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ituation of children in the country,

Taking note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treaty-monitoring bodies under the four treaties to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he most recent of which were given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January 2009,⁴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collaboration establishe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situation in the country, and the collaboration established with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children,

Noting the decision on the resumption, on a modest scale, of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encouraging the engagement of the Govern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 programmes benefit the persons in need of assistance,

Recalling its resolutions 60/173 of 16 December 2005, 61/174 of 19 December 2006, 62/167 of 18 December 2007 and 63/190 of 18 December 2008,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s 2003/10 of 16 April 2003, 2004/13 of 15 April 2004 and 2005/11 of 14 April 2005, Human Rights Council decision 1/102 of 30 June 2006 and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s 7/15 of 27 March 2008 and 10/16 of 26 March 2009, and mindful of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engthen its coordinated efforts aimed at achieving the implementation of those resolutions,

Taking note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⁵ regretting that he still has not been allowed to visit the country and that he received no cooperation from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aking note also of the comprehensiv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63/190,

Not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r-Korean dialogue,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Welcoming the recent resumption of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cross the border, which is an urgent humanitarian concern of the entire Korean people,

1. *Expresses its very serious concern* at:

(a) The persistence of continuing reports of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cluding inhuman conditions of detention, public executions, extrajudicial and arbitrary detention; the absence of due process and the rule of law, including fair trial guarantees and an independent judiciary; the imposition of

⁴ See CRC/C/PRK/CO/4.

⁵ See A/64/224.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and religious reasons; collective punishments; and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rison camps and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ii) Limitations imposed on every person who wishes to move freely within the country and travel abroad, including the punishment of those who leave or try to leave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or their families, as well as punishment of persons who are returned;

(iii)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expelled or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sanctions imposed on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abroad, leading to punishments of internment,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the death penalty, and, in this regard, urges all States to respec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o treat those who seek refuge humanely and to ensure unhindered access to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his Office,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situation of those who seek refuge, and once again urges States parties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thereto in relation to refugee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re covered by those instruments;

(iv) All-pervasive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right to privacy and equal access to information, by such means as the persecution of individuals exercising thei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their families, and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of his or her country;

(v) The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ch have led to severe malnutrition, widespread health problems and other hardship for the popul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for persons belonging to particularly exposed groups, inter alia,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vi) Continuing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women, in particular the trafficking of women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or forced marriage and the subjection of women to human smuggling, forced abortions,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cluding in the economic sphere, and gender-based violence;

(vii) Continuing reports of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children, in particular the continued lack of access to basi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or many children, and in this regard notes the particularly vulnerable situation faced by, inter alia, returned or repatriated children, street childr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whose parents are detained, children living in detention, institutions and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⁴

(viii) Continuing reports of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on the use of collective camps and of coercive measures that targe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ecide freely and responsibly on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A/C.3/64/L.35

(ix) Violations of workers'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the right to strike as defined by the obliga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¹ and the prohibition of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of any harmful or hazardous work of children as defined by the obliga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²

(b) The continued refusal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cognize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to extend cooperation to him, despite the renewal of the mandate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its resolutions 7/15 and 10/16;

2. *Reiterates its very serious concern* at unresolved questions of international concern relating to abductions in the form of enforced disappearance, which violates the human rights of nationals of other sovereign countries, and in this regard strongly calls upo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rgently to resolve these questions, including through existing channels, in a transparent manner, including by ensuring the immediate return of abductees;

3. *Expresses its very deep concern* at the precarious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partly as a result of frequent natural disasters, compounded by the misallocation of resources away from the satisfaction of basic needs, and the increasing State restrictions on the cultivation and trade in foodstuffs, as well as the prevalence of maternal malnutrition and of infant malnutrition, which, despite some progress, continues to affect the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a significant proportion of children, and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is regard, to take preventive and remedial action;

4. *Commends* the Special Rapporteur for the activities undertaken so far and for his continued efforts in the conduct of his mandate despite the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5.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pect fully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in this regard:

(a) To immediately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mentioned above, inter alia, by implementing fully the measures set out in the above-mentioned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recommendations address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the United Nations special procedures and treaty bodies;

(b) To protect its inhabitants, address the issue of impunity and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brought to justice before an independent judiciary;

(c) To tackle the root causes leading to refugee outflows and prosecute those who exploit refugees by human smuggling, trafficking and extortion, while not criminalizing the victims, and to ensure that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elled or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able to return in safety and dignity, are humanely treated and are not subjected to any kind of punishment;

(d) To extend its full cooper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including by granting him full, free and unimpeded acces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o othe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e) To engage in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ith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her Office, as pursued by the High Commissioner in recent year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and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by the Human Rights Council;

(f) To engage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ith a view to significantly improving workers' rights;

(g) To continue and reinforce its cooperation with United Nations humanitarian agencies;

(h) To ensure full, safe and unhindered access to humanitarian aid and take measures to allow humanitarian agencies to secure its impartial delivery to all parts of the country on the basis of need in accordance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as it pledged to do, and to ensure access to adequate food and implement food security policies, including through sustainable agriculture;

6. *Decides* to continue its examination of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its sixty-fifth session, and to this end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submit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Special Rapporteur to continue to report hi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제4권 2호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 HUMAN RIGHTS